

김정은 체제의 향방과 우리의 선택

- 일시 | 2012년 2월 14일 (화) 오후 2:00-5:00
- 장소 | 평화재단 강당
- 주최 |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 프로그램


13:30	(30)	접 수	
14:00	(5)	개 회	
14:05	(7)	여는말	윤여준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원장)
14:12	(8)	사 회	김형기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교수, 전 통일부차관)
14:20	(20)	발 표 1	김정은 체제의 향방과 주요 과제 장용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14:40	(20)	발 표 2	북한의 체제안정과 점진적 변화촉진을 위한 대북정책 과제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15:00	(10)	토 론 1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15:10	(10)	토 론 2	신범철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북한군사연 구실 실장)
15:20	(15)	휴 식	
15:35	(75)		질의응답 및 전체토론
16:50	(10)	닫는말	
17:00		폐 회	

차례

인사말	3
발표 1 김정은 체제의 향방과 주요 과제	5
장용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발표 2 북한의 체제안정과 점진적 변화촉진을 위한 대북정책 과제	29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참고문헌	44

인사말

김정은 정권이 표방한 대내 정책방향은 위안화 사용 공식 금지, 탈북자 단속 강화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통제를 강화해 나가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놓인 듯이 보입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당분간 북한의 건설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환경이 만들어지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이 체제안정을 위해서라도 향후 개방과 개혁의 압력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가 북한에 건설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남북관계에서 우리의 결정력이 커졌다는 점에서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하는 것이 북한의 향후 정책방향 선택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평화재단 평화연구원에서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정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북한의 김정은 체제의 향방에 대해 살펴보고, 김정은 정권이 체제의 안정을 위해서 풀어야 할 당면 과제가 무엇인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또한, 바람직한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대북정책을 견지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 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2년 2월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김정은 체제의 향방과 주요과제

장용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1. 시작하는 말
2. 김정은 체제 안정성에 대한 기존 논의
3. 독재정권 변동에 비추어 본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 평가
4. 김정은 체제가 물려받은 과제
5. 맺는 말

김정은 체제의 향방과 주요과제

장용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1. 시작하는 말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서 이후 김정은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의 권력승계가 급속하게 추진되고 있다. ‘뚜렷한 업적도 없는’ 김정은 부위원장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와 같이 권력승계를 위해 과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¹⁾

2008년 8월 김정일 위원장이 뇌혈관계 질환으로 쓰러진 후 2009년 1월 김정은 부위원장이 후계자로 내정되었으나 전체적인 권력승계 속도는 일정하게 조절되는 양상이었다. 그 과정에서 소위 ‘수업파’와 ‘건강파’ 간 권력승계 추진 속도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김정은 부위원장이 일천한 국정경험을 이유로, 후계수업의 필요성을 강조한 노장파 중심의 수업파와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이 심각하다는 인식 하에 권력승계를 가속하고자 한 소장파 중심의 건강파 간에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²⁾

그러나 김정일 위원장이 급성심근경색과 심장쇼크로³⁾ 급서하면서 모든 상황은 달라졌다. 김정은 부위원장은 김정일 위원장의 장례를 계기로 대내외에 자신이 북한의 ‘최고영도

1)김병로, “2012년 신년공동사설로 본 북한체제: 과속 스캔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칼럼, 2012년 1월 3일) (2012년 2월 2일 검색); @http://tongil.snu.ac.kr

2)량기석, “3대 세습 후계체제와 2010년” 『임진강』 통권 10호 (2010년 겨울), pp.35~38

3)‘김정일 동지의 질병과 서거원인에 대한 의학적 결론서’, 조선중앙통신 보도 (2011년 12월 19일 자)

자'임을 분명히 하면서 권력승계에 속도를 더하였다.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의 급서가 발표된 12월 19일 당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등 5대 기관 공동명의로 발표된 성명에서 “존경하는 김정은 동지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당과 군대와 인민의 일심단결을 굳건히 수호하며 더욱 철통같이 다져나가야 한다.”며 김정은 부위원장으로의 권력승계를 공식적으로 천명하였다.⁴⁾ 그리고 김 위원장의 장례식이 지난해 12월 29일 중앙추도대회를 끝으로 마무리되자마자 애도 기간⁵⁾ 중임에도 30일 김정일 위원장의 ‘10월 8일 유훈’에 따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으로⁶⁾ 김 위원장의 최고사령관 직위를 공식 승계하였다.

올해 들어서도 김정은 부위원장의 권력승계 작업은 속도를 더해 가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부위원장의 유일적 영도와 영군체계 수립을 강조하면서 현지시찰과 지도 등을 통해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 부위원장은 올해 들어 ‘근위서울 류경수 제105탱크사단’ 등 수령결사옹위의 상징인 ‘오중흡 7연대 칭호’를 수여받은 군부대 등을 집중적으로 시찰하고 만경대혁명학원도 방문하여 차세대 권력엘리트 후보들을 격려하는 등 권력공고화를 위한 핵심 지지기반 다지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동향을 보면 국정경험이 일천하고 뚜렷한 업적도 없는 김정은 부위원장은 준비가 부족한 후계자일지 몰라도 그런 후계자를 위한 권력승계 시나리오는 준비되었으며, 그 시나리오에 따라 초기 권력승계가 큰 도전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권위는 하루아침에 확립될 수 없으며 권력기반도 속성으로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시나리오는 시나리오일 뿐이다.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김정은 부위원장이 후계자로 내정되기 전에 제왕학과 영군술 등 최고지도자 교육을 받고 후계자로 내정된 2009년 1월 이후 김정일 위원장을 수행하면서 지근거리에서 국정운영을 경험하였다 할지라도⁷⁾ 이는 자신들의 독자적인 영역에서 공고하게 권력기반을 구축한 권력엘리트들을 장악하고 특히 대중적인 지지기반을 창출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조금 배운 것에 불과할 수 있다. 특히 김일성 전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권위와 유훈에 기대어 권력승계를 정당화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김일성 전 주석의 권위이고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일 뿐이다. 결국은 김정은 부위원장이 자신의 독자적인 권위와 권력기반을 만들어 내야 한다. 권력승계의 정당성은 김일성 전 주석의 적통이라고 확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⁸⁾ 따라서 현재 북한이 보이고 있는 초기 권력승계 모습만

4)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게 고향’, 조선중앙통신 (2011년 12월 19일 자)

5) 애도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북한이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 북한은 지난 2월 2일 국방위원회 정책국 명의의 공개 질문장에서 “우리의 애도 기간을 골라 동족을 노린 침략전쟁 연습을 강행하려고 획책하고 있다”며 아직도 애도 기간이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명박 역적 패당은 우리의 대화상대가 될 수 있는가를 스스로 돌이켜보아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2012년 2월 2일 자))

6)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 관한 보도’, 조선중앙통신 (2011년 12월 31일 자)

7) 이를 근거로 김정은 부위원장이 준비된 후계자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정성장, “수습 지도자’인가, ‘준비된 지도자’인가”, 『시사저널』 1160호 (2012년 1월))

8) Reudiger Frank, “North Korea after Kim Jong Il: The Risks of Improvisation.”, 38 North

으로 김정은 체제가 안착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다소 선부른 판단일 수 있다. 김정은 부위원장이 권력을 공고하게 장악하기 위해서는 권력엘리트 및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권위를 확립하고 통치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김정일 위원장이 생전에 준비한 권력승계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김정은 부위원장이 과거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을 지칭하던 ‘아버이’로까지 불리면서⁹⁾ 최고영도자로서의 모습을 연출하고 있으나 김정은 체제가 매우 취약하며 심지어 1년을 넘기기 어렵다는 지적마저¹⁰⁾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 현재까지 드러난 모습으로 봤을 때 김정은 부위원장은 분명 최고영도자의 길을 가고 있으며 소위 유일적 영도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분명 냉혹한 사회·경제·정치 현실이 존재하고 있다.

이 글은 현재 전망이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는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을 평가하고 향후를 전망하기 위해 우선 2장에서는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에 대한 기존의 평가를 검토하고, 3장에서는 비민주적 정권에서 주체들의 전략적 선택과 그에 따른 정치변동을 준거로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을 평가한다.¹¹⁾ 이를 바탕으로 4장에서는 김정은 체제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를 유훈이라는 맥락에서 살펴본다.

Succession Watch (2012년 1월 12일) (2012년 2월 2일 검색); @<http://38north.org/2012/01/rfrank011112>

9) “김정은 동지께서 설명절에 즈음하여 만경대혁명학원을 방문하시고 교직원, 학생들을 축하하시었다.”, 조선중앙통신 (2012년 1월 24일 자)

10) 신경진. “김정은 ‘주연’ 길어야 1년 vs 북 새 체제 예상보다 견고.” 『중앙일보』 (2012.2.3) 이 기사에 따르면 유호열 고려대 교수가 ‘김정은 주연 드라마가 1년 안에 종결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11) 다만, 북한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뿐 아니라 특히 권력엘리트 내부의 협력과 갈등에 대한 정보가 지극히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권력엘리트 내부의 동학에 대한 세세한 분석은 가급적 자제한다.

2. 김정은 체제 안정성에 대한 기존 논의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매우 넓은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다. 준비된 지도자로서 권력승계에 사실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서부터 1년을 넘기기 어렵다는 주장까지 다양하다.

이런 평가들을 구분해 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존재한다. 첫째는 김정은 정권의 권력이 공고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이며, 둘째는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것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불안정 요인들로 인해 위기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이고, 마지막으로 김정은 정권이 단명할 것이라는 평가이다.

먼저 김정은 권력이 공고화되고 있다는 평가들은¹²⁾ 주로 수령제와 유일체제라는 북한 정치체제의 특수성과 김정일 위원장 사후 북한이 보인 일사불란한 모습, 특히 김정은 부위원장을 신속하게 최고영도자로 부르면서 권력엘리트들이 권력투쟁 징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강조한다. 이들은 비록 김정은 부위원장이 김정일 위원장에 비해서는 짧지만 지난 몇 년간 후계수업을 받아왔으며 권력엘리트들을 장악하기 위한 노력들도 기울여 왔기에 ‘준비된 지도자’로서¹³⁾ 김정일 위원장의 유고대비 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했고 향후 유일적 영도체계를 확고히 할 것이며,¹⁴⁾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화된 시스템(의사결정체계)이 작동하고 있고,¹⁵⁾ 김정은 부위원장에 맞설 경쟁자가 없는 상황인 데다 김정일 위원장이 군을 견제하기 위해 당의 권위를 복원하는 한편 이영호 총참모장과 최용해 비서가 군과 당을 감독하게 함으로써 후계자를 위한 이중의 안전장치를 만들었기에¹⁶⁾ 김정은 정권이 안정적으로 권력을 공고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한다.

이 가운데는 또한 북한의 권력엘리트들이 현상유지를 선호, 선택하였고 이 권력엘리트

12) 광재훈. “전 통일 장관 3인 ‘김정은 체제 비교적 안정적…급변사태 가능성 낮아.’” 『프레시안』 2011.1.18.; 김진무.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의 의사결정체계.” 『동북아안보정보분석』 (2011.12.29.); 신법철. “김정은 체제의 향방과 정책적 함의.” 『주간국방논단』 제1392호 (2012.1.2.); 안홍욱·박영환·이영경. “김정은 실질적 권력승계 완료…‘직책’ 계승 속도 낼 듯.(이기동)” 『경향신문』 2011.12.29.; 정성장. “2012년 북한정세 전망.” 세종연구소. 『정세와 정책』 (2012년 1월호); 정성장. “‘수습 지도자’인가, ‘준비된 지도자’인가”; 정창현. “김정은 체제의 향후 전망과 우리의 대응.” 『창비주간논평』 (2012.1.25.); 최강. “Post-김정일 시대의 한반도 정세 전망.” IFANS FOCUS (2011.12.30.); 홍익표. “2012년 김정은 체제의 출범과 경제강국 건설 전망.” 코리아연구원 특별기획 제37호; Haksoon Paik. “kim Jung Un’s Power and Policy: Current State and Future Prospects.” December 27, 2011. <http://38north.org/2011/12/hskim122711>; Mark E. Manin. “Kim Jong-il’s Death: Implications for North Korea’s Stability and U.S. Policy.”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42126. December 22, 2011.

13) 정성장. “‘수습 지도자’인가, ‘준비된 지도자’인가.”

14) 정창현. “김정은 체제의 향후 전망과 우리의 대응.”

15) 김진무.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의 의사결정체계.”

16) Haksoon Paik. “kim Jung Un’s Power and Policy: Current State and Future Prospects.”

들의 특권을 지켜줄 재원을 제공할 핵심적인 행위자로 중국이 존재하고 있기에 김정은 정권이 안정적일 수 있다는 평가도 존재한다.¹⁷⁾ 한편 김정은 정권의 안정성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는 아니지만 시장화의 진전과 외부문화유입 등에 따른 북한 사회계층의 재구조화를 주목함에도 불구하고 향후 북한 사회체제가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으로써 사회구조 변동이 정권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는 논의도 있다.¹⁸⁾

다음으로 단기적인 안정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불안정 요인들이 존재하기에 위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들은¹⁹⁾ 주로 김정은 부위원장의 지도력이나 사회경제적인 요인들에 주목한다. 이들도 기본적으로는 김정은 정권이 안정적일 것이라고 보는 시각들이 제시하는 근거들을 고려하여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이들은 김정은 체제가 자리 잡아가면서 계파가 형성되고 이들 간의 권력 갈등이 생길 가능성과 특히 장성택을 중심으로 김정은 부위원장이나 군부가 갈등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²⁰⁾ 김정은 부위원장과 권력엘리트들, 그리고 주민들 간의 세력관계에 기초한 갈등과 협력 관계나 정책실패에 따른 정치적 위기 발생 가능성²¹⁾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곤궁한 나라를 물려받은 김정은이 현재와 같은 길을 지속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새로운 길을 선택하거나 붕괴 위협을 감수해야 하는 기로에 설 수 있고²²⁾ 그 과정에서 반대 세력이 등장하는 등 정권과 체제에 대한 위협이 대두될 가능성²³⁾ 등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김정은 부위원장의 엘리트 내부 갈등 조정 능력,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정권과 사회 간의 관계, 시장관리 문제와 외부와의 접촉 증대를 불안정 요인으로 주목하면서 김정은 부위원장과 북한 정권, 즉 독재자와 독재정권을 분리하여 김정은 부위원장에게 더 큰 위협이 되는 것은 엘리트들 간의 권력투쟁이고 북한정권 자체에 더 위협적인 것은 정권과 사회 간의 긴장고조라는 점을²⁴⁾ 강조한다.

17) Mark E. Manin. "Kim Jong-il's Death: Implications for North Korea's Stability and U.S. Policy."

18) 이우영. "김정일 사후 북한의 정책 전망." 국회입법조사처 간담회 자료 (2012.1.11.);

19) 김병로. "김정은 체제의 현황과 남북관계." 제32회 KPI 평화포럼 자료집 (2011.12.27.); 김근식. "김정은 체제의 미래와 남북관계." 제32회 KPI 평화포럼 자료집 (2011.12.27.); 박형중. "북한 권력구조와 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12.1.18.); 오경섭.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의 국내정세." 세종연구소. 「정세와 정책」 (2012년 2월호); 장용석. "김정일 사후 북한의 정책 전망." 국회입법조사처 간담회 자료 (2012.1.11.); 장용훈. "김정일 사후 북한의 정책 전망." 국회입법조사처 간담회 자료 (2012.1.11.); EAI. "김정은 체제의 미래와 한국의 전략: 공진(coevolution) 전략의 본격적 모색." EAI 논평 제24호 (2012.1.2.); Evans J.R. Revere. "Dealing with North Korea's New Leader: Getting it Right." PacNet No. 70A (December 27, 2011).

20) 장용훈. "김정일 사후 북한의 정책 전망."; 오경섭.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의 국내정세." 오경섭은 북한의 지배연합을 이익연합으로 보고 지배연합 내에서 권력과 부의 분배를 둘러싼 권력투쟁 가능성을 주목한다.

21) 장용석. "김정일 사후 북한의 정책 전망."

22) Evans J.R. Revere. "Dealing with North Korea's New Leader: Getting it Right."

23) EAI. "김정은 체제의 미래와 한국의 전략: 공진(coevolution) 전략의 본격적 모색."

마지막으로 김정은 부위원장이 권력승계에 실패할 것으로 보는 시각은²⁵⁾ 권력투쟁 폭발과 민중봉기 등 극단적인 불안정 상황의 발생 가능성을 주목한다. 이들은 최종 결정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분산된 의사결정권을 새로운 지도자가 장악하려고 할 때 합의도출 능력이 붕괴할 수 있다는 점²⁶⁾을 제시한다. 권력암투 가능성이나 김정은 지도력의 불확실성과 그에 대한 불신,²⁷⁾ 김정은 부위원장의 정책결정능력 부족과 대외적 혼란에 따른 지도부의 응집력 약화, 그리고 그로 인한 민중봉기 가능성²⁸⁾도 지적한다.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구축 실패와 2012년 강성대국 진입 불가에 따른 후계자의 첫 국가적 정책 실패, 외부정보 유입에 따른 주민들의 이웃국가와의 비교인식 증가,²⁹⁾ 고위 엘리트들의 김정은 부위원장에 대한 정당성 결여 평가와 실질적 권력장악 가능성,³⁰⁾ 현하 북한의 권력승계 과정이 즉흥적이고 김정은 부위원장의 정당성 확보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데다 북한 사람들은 생각 없는 로봇이 아니며 엘리트들도 공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궁정 반란이나 제2의 용천폭발사고와 같은 것이 일어날 가능성,³¹⁾ 2012년 강성대국 진입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

24) 박형중. “북한 권력구조와 정책 방향.” 박형중은 ‘시장은 관리하고 활용하기 나름’이라면 시장 그 자체가 독재자나 정권에 대한 위협요소는 아닐 수 있다고 본다. 사실 시장이라는 공간이나 경제운영 기제가 사적인 경제활동의 증가에 따른 시민사회 형성의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하지만, 독재자와 권력엘리트들이 특권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도 동시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지적은 북한의 시장 확산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주목될 필요가 있다.

25) Cho Han Bum. “The Possibility of a Crisis in North Korea in 2012.” *KINU Online Series* 2012-03 (2012.1.9.); Bruce Klingner. “Morning Bell: The Death of Kim jong Il.” *The Foundry*. December 19, 2011. <http://blog.heritage.org/2011/12/19/morning-bell-the-death-of-kim-jong-il>. (검색일: 2012.2.2.); Ken Gause. “Leadership Transition in North Korea.”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Report*. January 2012. <http://www.cfr.org/north-korea/leadership-transition-north-korea/p27071>. (검색일: 2012.2.2.); Ken Gause. “Decision-making in a Post-Kim Chong-il North Korea.” *The Peninsula* (Washington D.C.: KEI, December 23, 2011). <http://blog.keia.org/2011/12/decision-making-in-a-post-kim-chong-il-north-korea>. (검색일: 2012.2.2.); Michael J. Green. “North Korea After Kim Jong Il.” *Washington Post*. December 20, 2011; Nicholas Eberstadt. “North Korea’s kim Jong Il Failed to Prepare His Successor.” *The Daily Beast*. December 20, 2011. <http://www.thedailybeast.com/articles/2011/12/20/north-korea-s-kim-jong-il-failed-to-prepare-his-successor.html> (검색일: 2012.2.2.); Nicholas Hamisevicz. “Danger Behind the Veil of Transition in North Korea.” *The Peninsula* (Washington D.C.: KEI, December 22, 2011). <http://blog.keia.org/2011/12/danger-behind-the-veil-of-transition-in-north-korea>. (검색일: 2012.2.2.); Reudiger Frank. “North Korea after Kim Jong Il: The Risks of Improvisation.”; 유희열. “김정은 세습 정권과 권력구조 변화 전망.” 제3회 한반도포럼 학술회의 발표자료. (2012.2.2.).

26) Ken Gause. “Decision-making in a Post-Kim Chong-il North Korea.”

27) Nicholas Hamisevicz. “Danger Behind the Veil of Transition in North Korea.” 이와 관련, 미국의 보즈워스 전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이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더 집단적인 체제”라며 아직 검증되지 않은 김정은 부위원장에 김정은 부위원장과 같은 결정권한을 주는 것은 집단적 자살행위가 될 것이기에 북한의 “군 장성이나 당 고위 관리들이 김정은 부위원장에 김정은 부위원장이 가졌던 수준의 권력은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보즈워스 ‘김정은 실권 장악 가능성 작아.’” 『연합뉴스』 2012.1.24.).

28) Michael J. Green. “North Korea After Kim Jong Il.”

29) Nicholas Eberstadt. “North Korea’s kim Jong Il Failed to Prepare His Successor.”

30) Bruce Klingner. “Morning Bell: The Death of Kim jong Il.”

하여 위기가 발생하면 김정은 부위원장이 희생되고 권력엘리트들이 김정남이나 김평일, 김경희 등 다른 가계 구성원을 지도자로 내세울 가능성,³²⁾ 김정은 체제가 유신통치 기간인 현재의 잠정적 안정기를 지나 본격적으로 출범하면 권력엘리트들의 숙청과 이합집산, 노선 갈등 등이 발생하고 김정은 부위원장이 조정력을 발휘하지 못하여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³³⁾ 등도 지적한다.

이제까지 살펴본 기존의 논의들은 김정은 부위원장의 지도력, 권력엘리트 갈등, 주민들의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에 대한 ‘서로 다른 평가’에 기초하여 김정은 부위원장이 권력을 공고하게 장악했다는 평가부터 민주봉기에 의해 무너질 수도 있다는 평가까지 다양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평가와 전망은 일부를 제외하면³⁴⁾ 대부분 정치-권력관계만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인식을 보이거나, 사회경제적 위기를 주목하면서도 이것이 어떻게 정치적 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3. 독재정권 변동에 비추어 본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 평가³⁵⁾

1) 독재정권의 정치변동 경로

개인 지배적 특성이 강한 독재정권의 변동과 관련하여 신가산제 지배체제의 민주화와 관련된 변수들을 준용하면 독재자 이외에 자율적인 군부, 온건한 반대세력, 혁명적 반대세력, 외부세력 등을 주요변수로 설정할 수 있다.³⁶⁾

31) Reudiger Frank. “North Korea after Kim Jong Il: The Risks of Improvisation.”

32) Cho Han Bum. “The Possibility of a Crisis in North Korea in 2012.” 조한범은 이런 점에서 현재 북한이 보이는 안정성은 김정은 부위원장이 권력을 틀어쥔 결과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 수호를 위해 중심이 필요한 권력엘리트들이 김정은 부위원장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33) 유호열. “김정은 세습 정권과 권력구조 변화 전망.”

34) 신범철. “김정은 체제의 항방과 정책적 함의.”; 박형중. “북한 권력구조와 정책 방향.” 등. 신범철은 관리된 권력승계, 승계경쟁, 승계실패라는 세 가지 시나리오로 김정은 체제를 전망하고 박형중은 독재정권의 일반적인 변동이라는 관점에서 북한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

35) 3장은 2011년 통일연구원 공동연구과제(박형중 외.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 향후 5년(2012-2016)간의 정세를 중심으로』 서울: 통일연구원, 2011)의 일부로 작성하였던 원고를 발췌하여 수정·보완한 것이다.

36) Snyder, Richard. 1992. “Explaining Transitions from Neopatrimonial Dictatorships.” *Comparative Politics*. Vol. 24, No. 4. pp. 379-385.

이 가운데 군부의 제도적 자율성 정도, 독재자에 대한 온건한 반대집단의 상대적인 조직적 강도(organizational strengths), 독재자에 반대하는 혁명적 반대집단의 상대적인 조직적 강도가 핵심적인 변수로 작용하고 통치자와 군부, 통치자와 국내 엘리트, 통치자·군부·반대세력 등 국내 행위자와 외부세력(foreign power)과의 관계도 결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이와 함께 지배엘리트 내의 세력관계 변화와 이행의 계기를 제공하는 균열 촉발 및 심화, 이행 촉진 요소로서 대중적인 저항이나 요구가 존재한다. 독재정권이라 하더라도 특정한 시기 대중적 압력이나 사회적 요구가 지배연합(ruling circle)에 영향을 미치며 비록 참여 또는 중재 채널과 절차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정권이 대중적 차원의 고려에서 자유롭지는 않기³⁷⁾ 때문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감안하여 개인통치적 성격이 강한 비민주적 정권의 변동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8가지를 상정할 수 있다.

〈개인독재 정권의 이행〉

구분	자율적 군부	강력한 온건 야당	강력한 혁명적 야당	후속 정권
1	존재	존재	존재	이중권력하의 민주주의(필리핀)
2	존재	존재	부재	민주주의
3	존재	부재	존재	이중권력하의 군사통치
4	존재	부재	부재	군사통치(아이티, 파라과이)
5	부재	존재	존재	온건·과격파 간 갈등 만연
6	부재	존재	부재	독재자·온건파 간 갈등 만연
7	부재	부재	존재	혁명(쿠바, 이란)
8	부재	부재	부재	안정(자이레)

* Snyder, Richard. 1992. "Explaining Transitions from Neopatrimonial Dictatorships." *Comparative Politics*, Vol. 24, No. 4, p. 382.

첫 번째와 두 번째 경로는 자율적인 군부 분과와 온건한 엘리트 집단이 외부세력의 후원하에 독재자를 축출하고 정권을 장악하여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경우로서, 자율적인 군부가 독재자의 축출과 온건한 민간세력의 집권에 협조함으로써 혁명 발생을 방지하는 것이다.

37) Geoffrey Pridham. *The Dynamics of Democratization: A Comparative Approach*. (London and New York: 2000). p. 77.

세 번째와 네 번째 경로는 자율적인 군부가 존재하지만 이들과 연합하여 정권을 담당할 수 있는 온건한 반대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군부가 독재자를 축출하고 정권을 장악하는 경우이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군부가 독재자에게 포섭되어 조직적 자율성을 상실한 반면 온건한 반대세력이 존재하는 경우로서 혁명적인 반대세력이 있을 경우 온건한 반대세력과 혁명적 반대세력 간의 갈등이, 혁명적 반대세력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독재자와 온건한 반대세력 간의 갈등이 일상화되는 경로이다. 일곱 번째는 군부가 독재자에 포섭된 상황에서 혁명적 반대세력이 강력하게 조직화된 경우로서 독재자와 혁명적 반대세력 간의 갈등이 혁명으로 발전하는 경로이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군부가 독재자에게 포섭된 상황에서 온건한 반대세력뿐 아니라 혁명적 반대세력도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현 독재자가 권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경우이다.

2) 북한의 정권 변동 관련 주요 변수와 예상 경로

북한 정권도 흔히 수령제 또는 유일지배체제로 불리듯이 개인 지배적 특성이 강한 독재 정권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앞에서 언급한 주요변수들을 감안하여 정권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소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권력엘리트 내 갈등구조

① 기본적 균열구조

자원배분이 중앙의 계획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회에서 희소한 자원의 분배를 둘러싸고 기관과 지역 차원의 본위주의 현상이 발생하고, 여기에 명령-지시와 그 이행을 둘러싼 상층과 중하층 간의 갈등이 증첩되는 양상이다. 신가산제 형태의 독재정권에서는 독재자에 대한 충성경쟁 또는 독재자와의 후견관계 확보를 위한 경쟁이나 독재자 자신이 통치방법의 일환으로 분할과 세력교체를 활용하는 데 따른 기관 또는 세력 간 균열이 발생한다. 신가산제 정권에서 권력은 복잡한 패턴-클라이언트 네트워크를 통해 행사된다. 개인과 조직의 최고위층에 위치한 사람은 자원과 처벌을 더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배하고 하위 패턴(subpatron)은 패턴의 감독하에 하위 영역들을 통제한다.³⁸⁾ 세대교체도 중요한 균열 요소로 작용하는 바, 출신 성분 등에 따른 정치적이고 폐쇄적인 엘리트 충원 과정은 집단 간 구획을 공고화시키면서 세대를 이어 이를 재생산한다.

북한에서 나타나는 기관본위주의의 특징적인 양상은 재정위기로 인한 기관별 자력생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이권 갈등, 특히 대외무역이나 투자와 외화획득을 둘러싼 이익갈등의

38) Henry E. Hale. "Eurasian Politics as Hybrid Regimes: The Case of Putin's Russia," *Journal of Eurasian Studies* 1 (2010). p. 34.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국경지역에 대한 비사회주의 검열의 강화 이면에는 군부와 당 기관들 간의 무역권을 둘러싼 갈등이 존재하기도 하며, 무엇보다 대외무역권한이자 규모인 ‘워크’의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나 워크에 따른 무역을 실행하기 위한 국내 수출자원 확보 등을 둘러싼 기관들 간의 갈등으로 표출된다. 기관본위주의는 중앙당 각 부서들, 호위국, 인민무력부, 대남기구,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부, 청년동맹 등 특권기관으로부터 리당이 나 분조 등 말단조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리 협동농장이나 연합기업소 등도 사실상 하나의 ‘소왕국’으로서 기관본위주의를 표출한다.³⁹⁾

지역본위주의의 경우 지시 이행과 보상의 기본단위가 지역인 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지역 내 다양한 기관들이 상호경쟁하면서도 지역적인 차원에서 협력하는 구조들이다. 그런데 이것이 경제위기에 따라 심화되는 양상인 데다, 최근 들어 중앙 차원의 비사회주의 검열이 강화되면서 지역 차원에서 비사회주의투쟁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양상도 나타난다.⁴⁰⁾

한편 지역적인 편차가 커지고 있는 것도 주목된다. 사회 전 부문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대외무역에 유리한 국경지역, 수산물 채취와 같이 수출자원 확보가 용이한 해안지역들이 대외무역이나 시장경제활동을 통해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수준을 보이는 반면 내륙의 농촌지역은 균량미 공출 등 국가의 자원징발과 통제 강화로 상대적으로 빈곤한 지역으로 전락하는 등 지역적인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특히 과거 평성이나 최근 순천 등과 같이 도매상들이 밀집된 지역이나 생산거점으로 자리 잡은 지역의 경우 높은 소득수준을 향유한다.⁴¹⁾ 여기에서 최근 평양시 리모델링 등 부족한 자원을 평양을 중심으로 집중 투입하면서 평양과 기타 지역 간 편차 확대도 심화되는 양상이다.⁴²⁾

관료적 조정 기제하에서 상층과 중하층 간 지시와 지시이행을 둘러싼 갈등과 거리가 일상적인 행위 양태로 자리 잡은 데다 특히 경제위기와 재정위기에 따른 자력갱생 강조는 하부의 자율성과 각종 불법 또는 비법 행위의 증가를 유발하면서 상층과 중하층 간 갈등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중하층의 경우 상층의 지시와 현실적인 상황 간의 격차를 체감하면서 항상적으로 지시이행과 생존 차원에서 현실적인 방안들을 모색해야 하는 데다 주민들의 요구와 불만 등을 접하면서 상대적으로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개혁 개방의 필요성을 절감하지만⁴³⁾ 상층의 불법 또는 비법행위 단속에 따른 숙청의 위협에도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에 따른 좌절감도 크다.⁴⁴⁾

39) 리규이. “변화하고 있는 조직생활의 나라.” 『임진강』 통권 9호(2010년 가을). p. 127.

40) *ibid.* pp. 127~128.

41) 손혜민. “박기원, 그 순천사람.” 『임진강』, 통권 5호(2009년 9월). pp. 45~73.

42) 좋은벗들. “지방 간부들, 식량난 걱정에 강성대국 뒷전.” 『오늘의 북한소식』 제443호(2011.12.14.); 동용승. “북한사회의 양극화, 인민의 활력소?” 『민족화해』 통권 제54호 (2012년 1-2월호).

43) 량기석. “3대세습 후계체제와 2010년.” 『임진강』, 통권 10호(2010년 겨울). pp. 39~41.

44) 이와 관련, 구동독의 경우를 보면 외관상 정권의 통일성이 근본적이고 주요한 균열과 사기저하를 은폐 하였으며, 구정권의 공무원들(중하층 관료)은 다른 동유럽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었다(Gareth Dale. “Modelling Democratic Transition in Southern and Central Europe: Did East Germany Experience ‘Transición’ or ‘Ruptura’?” in Yannis A. Stivachats (ed.).

북한의 경우 주민들을 출신성분에 따라 분류하고 그 출신성분에 의거하여 엘리트들을 충원해 왔다는 점에서 앞선 세대의 균열 또는 분파구조가 세대를 이어 유지되는 경향을 보인다. 1960년대 후반 소위 유일체제 확립과정에서 갑산파가 숙청되기 전까지 소련파·연안파·만주파와 같이 해방 이전 활동지역에 따른 분파구조들이 존재하였다면 1960년대 후반 갑산파가 숙청되면서 지역적 배경에 따른 분파들은 사실상 소멸하고 대신 김일성 가계와 항일혁명투사 후손이라는 혈연적 균열구조에 더하여 세대교체 과정에서 6·25 전사자·피살자 후손들이 핵심계층으로서 관료집단의 중하층에 편입되면서 이들 3대 세력 간의 균열 구조들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⁴⁵⁾ 항일혁명투사 후손들의 경우 중국에 대한 연고들을 활용하여 무역 부문을 중심으로 기득권을 구축하였으며 중국의 발전모델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 항일혁명투사 후손이나 6·25 전사자·피살자 유자녀 등과 같은 ‘새로운 세대’들은 시장을 통해 자기실현을 도모하면서 개혁개방의 필요성도 인식함으로써 김일성 가계와 일정한 대립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② 권력승계와 엘리트 교체

2009년 후계내정 및 2010년 9월 3차 당대표자회를 통한 후계공식화에 따라 김정은 부위원장의 독자적인 권력기반 구축이 추진되면서 새로운 엘리트 균열구조가 나타났다. 김정은 후계구축과 당과 국가기구 정비과정에서 세대교체가 적극적으로 추진되면서 70~80대 혁명 1~2세대들이 전반적으로 퇴진하고 50~60대가 핵심적인 권력엘리트로 부상하면서, 당·정·군의 중하층 특히 지방을 필두로 신진세력으로서의 세대교체가 가속되었다.

2010년 9월 3차 당대표자회에서 기존의 원로급 권력엘리트들이 당정치국을 중심으로 여전히 포진하게 되었으나 당정치국 후보위원을 중심으로 50~60대의 중견엘리트들이 부상하였다.⁴⁶⁾ 개정된 당규약에 따른 명예당원제가 시행되고, 김정은 후계구축과 관련된 군 인사가 이루어지는 등 당과 군을 비롯해 전반적인 세대교체가 적극 추진되었다.⁴⁷⁾

The State of European Integration, Burlington: Ashgate (2007). p. 201.)

45) 리규이. op. cit. pp. 128~131.

46) 2010년 3차 당대표자회를 통해 드러난 세대변동을 보면 리영호 총참모장(1942년생)이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고, 정치국 후보위원회를 중심으로 김평해 간부부장(1941년생), 우동측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1942년생), 김정각 총정치국 제1부국장(1941년생), 김창섭 국가안전보위부 정치국장(1946년생), 문경덕 평양시당 책임비서(1957년생), 김양건 통일전선부장(1942년생), 김영일 국제부장(1947년생), 박도춘 당비서(1944년생), 최룡해 당비서(1950년생), 장성택 당행정부장 겸 국방위원회 부위원장(1946년생) 등 50~60대 권력엘리트들이 전면 배치되었다. 또한 지난해 7월 24일 김정은 후계공식화 이후 최초로 실시된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를 통해 2만 8,116명의 대의원을 선출하면서 세대교체가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47) 박형중. “김정은 후계체제와 중앙과 지방의 전면적 간부교체.” KINU Online Series CO 11-32 (2011.11.17.); 정용수. “김정은, 당원 100만명 ‘젊은 피’ 교체.” 『중앙일보』 2011.3.11; 임정진. “북한 “젊고 생신한 당으로”...당간부 ‘물갈이’.” 『데일리NK』 2011.3.11; 김용훈. “김정은 선군정치” 이끌어 갈 新군부는 누구?” 『데일리NK』 2011.5.10; 최민석. “김정은, 군 ‘젊은 피’로 대폭 물갈이.” 『자유아시아방송』. 2011.3.21.; 이귀원. “北 숙청·세대교체...김정은 ‘인적기반’ 구축.” 『연합뉴스』 2011.6.2.

③ 강경파와 온건파

가산제와 같은 개인독재 정권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의 불만 누적이나 표출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독재자나 권력엘리트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강화하려는 시도와 함께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다.⁴⁸⁾

경제위기나 재정위기 상황에서 정권의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거나 정권유지 재원이 감소 또는 고갈되게 되면 특권 강화 경향이나 정당성 확보 경향 간의 간극이 커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기존 체제에 집착하는 보수-강경파와 변화를 모색하는 개혁-온건파 간의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강경파와 온건파 간의 대립과 갈등은 대외정책을 둘러싸고 더 분명하게 드러나기도 하는 바,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남정책의 진폭이나 대남라인 교체 등으로 표출되기도 하였다.

현재 북한의 지배연합 내에서는 김정일 위원장의 급서와 김정은 부위원장의 권력 공고화, 지속되고 있는 경제위기 등을 통제와 동원이라는 보수적인 방식으로 타개하면서 자신들의 권력기반을 공고화하고 각종 특권들을 유지하려는 강경파가 대내외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⁴⁹⁾ 경제적으로는 2009년 150일 및 90일 전투와 화폐개혁, 최근 2012년 강성대국의 문을 열기 위한 각종 건설사업에 대한 자원과 노동력 징발 및 동원,⁵⁰⁾ 비사회주의의 현상 척결을 위한 각종 사회통제와 시장경제활동 억제가 추진되었거나 추진되고 있다.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대외협력을 통한 외자유치와 경제회생이 모색되고 있으나 당과 국방위원회 등 기존의 보수적 집단이 이를 주도하면서 특권적인 권력기반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⁵¹⁾ 대외적으로도 공안 부문의 대중국협력이 심화되고⁵²⁾ 과거 대남대화에 나섰던 인사들을 대거 숙청하는 한편⁵³⁾ 국방위원회 등이 대남정책을 주도하는 형국이다.⁵⁴⁾

48) 장용석. “국가사회주의와 국가계급 지배의 동태성: 북한지배체제 연구에 대한 함의.” 『통일문제연구』 통권 51호(2009년 상반기). pp. 400~408; 좋은벗들. “북한 주민들, 새 지도부에 중국식 경제발전 원해.” 『오늘의 북한소식』 제441호(2012.2.8.) 등 참조.

49)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 『조선중앙통신』 2011.12.31. 등 참조.

50) 대표적으로 평양 10만세대 주택건설과 관련된 동원을 들 수 있다.(최민석. “북 주민, 10만 세대 징수금 ‘일사금’ 비난.” 『자유아시아방송』 2011.8.11.)

51) 최근 북한의 대외경제협력과 관련 내부개혁 없는 반시장적 개방에 대해서는 최봉대. “북한의 지역경제협력 접근방식의 특징: 신가산제 사인독재정권의 혁명자금관리제도와 대외경제협력의 제약.” 『현대북한연구』. 제14권 제1호(2011년). pp. 189~238. 참조

52) “조선 인민보안부와 중국공안부 협조에 관한 합의서 조인” 『조선중앙통신』 2011.2.13.; 차대운. “北, 시위진압 장비 중서 대량 구입.” 『연합뉴스』 2011.6.21.

53) 윤완준. “북, 대남 대화과 30명 숙청했다.” 『동아일보』 2011.7.15.

54) “민족의 대국상앞에 저지른 리명박역적패당의 만고대죄를 끝까지 결산할것이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 『조선중앙통신』. 2011.12.31.; “리명박역적패당은 우리의 대화상대가 될 수 있는가를 스스로 돌이켜보아야 한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 공개질문장.” 『조선중앙통신』. 2012.2.2.; “조선의 국방위원회 정책국 일군들과 기자회견 진행.” 『조선중앙통신』. 2012.2.2. 등 참조.

한편 지배연합 내부의 개혁-온건파와 관련, 김정은 부위원장의 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할 만한 반대세력은 존재하지 않지만 2000년대 초중반 경제개혁 조치를 추진하였던 상층과 중하층 관료,⁵⁵⁾ 특히 항일투사 후손이나 중하층을 형성하고 있는 새 세대 등이 국가에 의한 통제보다 시장경제활성화에 이해관계를 지닌 개혁세력으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겠다고 내부동원과 대중국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경제회생을 모색하고 있으나 주목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지배집단 내에서 특권확대 경향보다는 정당성 확보 필요성이 증대하면서 과거 개혁개방을 추진했던 세력들이 다시 힘을 얻을 가능성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2003년 이후 북한의 시장 확대 등 각종 개혁을 추진하다가 2007년 숙청되었으나⁵⁶⁾ 최근 김경희가 부장으로 있는 당경공업부의 부부장으로 복귀한 박봉주 전 총리 등의 행보가 주목된다.

(2) 최고 통치자와 군부

김정은 부위원장이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군에 대한 장악력을 높여온 데다, 군내 당 조직인 총정치국을 통해 군에 대한 당적 통제도 유지되고 있기에 군이 최고통치자에 대항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변동이 촉발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북한군이 현대화된 군대를 지향하고 있는 점, 물자에 대한 공급과 관련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이 매우 활발한 점, 군부 내 상층과 하층-간부군과 서민군-정치지휘관-군사지휘관, 세대 간 균열 등이 존재한다는 점은 잠재적인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

북한군은 1960년대부터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군의 전문성을 제고해 왔다는 점에서, 총정치국을 매개로 당에 의한 통제가 유지되고 있으나, 독재자의 사병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일정하게 전문성을 보유한 현대화된 군으로 발전해왔으며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사회경제적, 정치적으로 관철시킬 조직기반과 노하우를 확보한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선군정치는 이러한 군의 위상과 기능, 역할을 사회경제적, 정치적으로 강화하는 이념적 기반이자 정책적 기조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김정일 시대에 선군정치를 주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량미 공급조차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들이 지속되면서⁵⁷⁾ 간부군과 서민군 간의 격차와 위화감, 갈등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민소요나 폭동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군이 통일되고 단결된 모습으로 김정은 부위원장의 정권수호 명령을 이행할지 불확실하다. 호위사령부나 평양방어사령부 등 특수한 부대를 제외하면 지방과 전선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상당수 부대들이 유사

55) 량기석. op. cit. p. 39.; 이시마루 지로. “조선의 경제관료 극비 인터뷰: 우리나라의 경제형편(중).” 『탑진강』 통권 2호(2008년 3월), pp. 57~59.

56)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2000-09)』.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참조.

57) 좋은벗들. “북한 군인도 먹고 살자.” 『오늘의 북한소식』 제414호, 2011.7.13.

시 정권입장에서는 취약한 고리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한 군부 내 부문 간에 경쟁과 대립구조가 상존하고 있으며 권력승계 과정에서 군부의 균열이 심화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과거 김일성 사후 김정일 위원장의 권력승계 과정에서 호위사령부 대신 보위사령부가 득세한 경우나 최근 호위사령부가 득세하는 양상, 군부 내 세대교체 등에 따른 주요인사 변동 등이 이를 시사한다.⁵⁸⁾

(3) 혁명적 반대세력

북한 내에는 1990년대 중후반 김정일 위원장의 권력장악 과정에서 숙청된 인사들이 혁명적 반대세력일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북한 내에 조직화된 혁명적 반대세력이 존재한다는 가시적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신 외부에는 탈북자를 중심으로 한 반체제 세력이 존재하며 이들은 대북전단 살포 등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한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북한 내부의 정치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큼 세력기반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4) 외부세력

김정은 체제를 뒷받침하는 핵심적 후원세력으로 중국이 존재하며 최근 몇 년 간 양국 간 협력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면서 대남·대미 관계의 경색이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가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지역정세 안정 차원에서 북한의 붕괴를 우려하는 중국이 북한체제 자체를 붕괴시키기 위해 자신들의 커진 영향력을 활용하지는 않겠지만, 역설적으로 지역정세 안정을 위해 북한 정권의 교체를 시도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북한이 전통적으로 중국의 대국주의를 경계해 왔고 특히 1990년대 탈냉전기에 대미·대일·대남 관계 개선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해 왔으며 러시아도 대중국 견제를 위한 적절한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의 영향력이 북한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확대될지는 의문이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개발도 정치군사적인 자주성 견지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레버리지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⁵⁹⁾

북한의 입장에서는 과거 1956년 8월 종파 사건이나 1960년대 중소분쟁 및 문화대혁명

58) 최민석. “김정은, 호위사령부 ‘돌격대’로 활용.” 『자유아시아방송』 2011.8.6.; 신지홍. “北 인민무력부장 무력화..김정은 세력 득세.” 『연합뉴스』 2011.8.11.

59) 북한은 핵무기가 미국이 아닌 ‘대국’들 틈에서 민족의 존엄을 높인 것이라는 인식을 표출, 중국에 대한 견제의도를 드러내기도 하였다(“김정일 동지의 혁명유산.” 『노동신문』 2011.12.28.).

과정에서 중국과의 갈등을 겪었던 역사적 경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앞에 있는 적(남한이나 미국)보다 뒤에 있는 우방(중국)이 정권교체를 시도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항상적으로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가 심화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중국의 대북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특히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이 강화되는 가운데 지난해 북·중동맹 50주년을 맞아 양국 간 군사협력이 확대되고 있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양국 군부 간 교역 등이 주요한 협력 분야로 발전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계들이 북한 군부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주목된다.

한편 남한과 미국·일본의 대북정책 방향도 북한 내부의 다양한 세력들 간 균열구조와 이들 간의 세력관계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북압박이 강화될수록 북한의 태도가 강경해지는 것은 이면에 강경파의 입김이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역으로 대화와 협상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대남·대외 협상인사들의 모습이 공개석상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이들이 외부와의 협력을 통해 내부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시키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5) 정권과 주민

개인 지배적 특성이 강한 독재정권의 정치적 이행(political transition)은 사회적 저항에서 비롯되는데, 이 정권의 행태들은 재정적 위기와 경제성장에서의 문제를 야기하고, 이는 후견관계를 기초로 정당성보다는 억압적 수단에 의존한 정권이 이를 유지할 자원의 결핍으로 이어짐으로써 엘리트 균열보다는 사회적 저항으로부터 정치적 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인다. 이 경우 반드시 조직화된 반대세력이 존재할 필요는 없다.⁶⁰⁾

이와 관련, 1990년대 이후 북한은 심각한 경제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재정규모도 고난의 행군 이후 급격히 줄어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들은 생존 차원에서 시장을 활용한 사적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자율적인 경제활동 공간을 확보하였고 이것이 국가의 계획경제 및 통제와 공존하면서 일정한 긴장관계를 유발시키고 있다.⁶¹⁾ 북한의 시위진압 기동대 창설 및 관련 장비 수입⁶²⁾은 중동에서의 민주화

60) Michael Bratton and Nicolas Van De Walle. "Neopatrimonial Regimes and Political Transitions in Africa." *World Politics*. Vol. 46, No. 4 (Jul., 1994). pp. 460~462.

61) 사적 경제활동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장 확대를 주도하고 있는 전후 베이비붐 세대가 주목되는 바, 이들은 1980년대에 8·3인민소비품증산운동을 통해 개인적 경제활동을 체험하고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시장경제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으며 2000년대 개혁시기 시장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견인하면서 현재 북한 내 핵심적인 경제활동 주체로서 시장경제활동을 주도하고 있다.

62) 차대운. op. cit.; "이집트에 화들짝, 북한 폭동진압기동대 창설." 「중앙일보」 2011.2.24.; 이용수. "北,

움직임에 대한 정권 차원의 대응이라는 측면이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2009년 화폐개혁 이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주민들과의 긴장관계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에서 사적인 시장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정치적으로 계층화된 사회구조가 사회경제적인 계층구조로 전환되면서⁶³⁾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정권과 사회 간의 긴장을 높이고 있다. 불평등 자체가 직접적으로 정치적 위기를 촉발시키지는 않지만⁶⁴⁾ 사회적 불안정과 정치적 불안정을 가중시키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움직임과 관련해 지역적인 편차가 발생하면서 중국과의 교류협력(북중 접경지역 도시, 청진·원산·남포 등 대외교역 도시)이나 남한과의 협력(개성공단)이 활발한 지역이나 상업유통의 거점지역(평양·순천 등)을 중심으로 개혁과 개방에 대한 이해관계들이 확대될 수 있는 ‘취약한 고리’들이 만들어지고 있을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북한 사회에서 시장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외부정보 유입과 내부 정보 소통이 과거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도 간과될 수 없다.⁶⁵⁾

한편 사적인 경제활동들이 활발해지면서 주민들에 대한 통제와 동원 수단인 조직생활이 이완되고⁶⁶⁾ 조직사상적 통제에 기반한 정치공안 대신 검찰이나 인민보안부 등 법적 처벌 위주의 사회공안이 사회질서 유지의 주요 수단으로 부상하였다.⁶⁷⁾ 각종 비사회주의 검열로 대표되는 사회공안은 정치공안을 위한 물적 토대가 붕괴한 상태에서 권력교체기와 중동 민주화 바람 등으로 인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사회공안은 주민들 사이에서 공포를 확산시키면서 단기적으로는 사회질서 확립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주민들의 불만 누적 등에 따라 정권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정황들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불만 등이 생계형 항의 수준을 벗어나 정치적인 저항으로 발전하지는 않고 있다. 기존의 전체주의적 억압기제들이 어느 정도 작동하고 사회공안이 일정한 효과를 발휘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을 야기하지는 않고 있다.⁶⁸⁾ 또한 비공식적인 제도들은 공식적인 제도들이 비효율적인 경우 이들과

주민 소요 대비 道·市·郡에 특별기동대 신설.” 「조선일보」 2011.6.3.

- 63) 장용석. 「북한의 국가계급 균열과 갈등구조」.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pp. 108-121, 184-208; 김수암 외. 「북한 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서울: 통일연구원, 2011. pp. 75-157; 이우영. “김정일 사망과 북한사회의 변화.” 제3회 한반도포럼 학술회의 발표자료. (2012.2.2.). 등 참조.
- 64) Jan Teorell. *Determinants of Democratization: Explaining Regime Change in the World, 1972-2006*.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pp. 60-63.
- 65) 이와 관련, 이동통신의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 (“北 휴대전화 가입자 100만명 돌파.” 「연합뉴스」 2012.2.3.; 양희정. “중국산 불법 휴대폰이 북 체제에 더 위협” 「자유아시아방송」 2011.8.9.; 김홍광. “북한에도 3G 핸드폰과 인터넷 도입 열풍.” 「통일한국」 2010년 12월호; 강동완·박정관. 「한류 북한을 흔들다 : 남한 영상매체의 북한 유통경로와 주민 의식 변화」. 서울: 늘봄플러스, 2011. 등 참조.
- 66) 리규이. op. cit. pp. 112~131.
- 67) 류경원. “조선의 정치형세와 화폐개혁 고난 및 천안함 사태.” 「입진강」 통권 8호(2010년 여름). pp. 23-29.
- 68) 경제위기는 분명히 정치변동에 영향을 미친다(Natasha M. Ezow and Erica Frantz. *Dictators and Dictatorships: Understanding Authoritarian Regimes and their Leaders*. New York: The

충돌하거나 이를 대체하기도 하지만 공식적인 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이를 보완하거나 이와 조정과정을 거쳐 공존하기도 한다는 점에서⁶⁹⁾ 주민들의 자율적인 경제활동 증가 및 이와 연관된 관료들의 비공식적 경제활동이나 부패 등이 공식적인 제도의 침식과 함께 공식적인 제도를 보완하면서 정권과 체제 안정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다면 김정은 체제가 단기적으로 정치변동 과정에 들어갈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북한의 군부가 김정은 부위원장의 사명으로 전락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일정하게 자율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반면 선군정치하에서 군부의 이해관계들이 정책에 적절히 반영되는 데다 당에 의한 통제 등 감시와 견제 메커니즘도 구축되어 있다는 점에서, 쿠데타와 같은 정권장악을 시도할 가능성은 낮다. 또한 혁명적 반대세력이 북한 내부에서 주민들이나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으로는 주민들이 생계를 위한 불만 등을 드러내는 경우는 있으나 이것이 정치적 저항으로 조직화되거나 확산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앞에서 살펴본 8가지 시나리오 중 ‘안정’적인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즉 현 김정은 정권이 당분간 정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를 권력교체 상황과 연결해서 살펴보면 현재로서는 핵심적인 권력엘리트들이 다양한 균열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기득권 수호를 위해 김정은 부위원장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정성이 향후 장기간 지속될지는 불확실한 것이 사실이다. 문제는 김정은 체제의 대내외 정책과 그에 따른 권력엘리트와 주민, 외부세력 등의 움직임이다. 김정은 체제가 직면한 문제에 대처해 나가는 과정은 정책을 둘러싼 다소 간의 내부 갈등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데다 정책이 실패로 귀결될 경우 이러한 논란은 정치적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으며 그 과정에서 김정은 부위원장의 지도력이 시험대에 오르고 김정은 부위원장과 권력엘리트들 간, 권력엘리트들 상호 간, 정권과 주민 간 세력관계가 변하면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김정은 체제는 이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향후 그 도전에 어떻게 대처하여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 내는가에 따라 김정은 부위원장의 운명을 포함해 정권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Contium International Publishing Group (2011). p. 139.; Jan Teorell. *Determinants of Democratization: Explaining Regime Change in the World, 1972-2006*. pp. 70-76). 그러나 경제 위기가 정치위기로 발전하는 과정에는 정치적 요인(이념이나 억압기제, 외부영향력 등)에 의해 매개되는 사회적 긴장과 갈등이 존재한다. 이는 지배연합 내부의 갈등을 포함해 다양한 정치세력들의 세력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점에서 경제위기가 곧장 정치위기로 비화되는 것은 아니다(장용석. “국가사회주의와 국가계급 지배의 동태성: 북한지배체제 연구에 대한 함의.” 참조.)

69) Gretchen Helke and Steven Levisky. “Informal Institutions and Comparative Politics: A Research Agenda.” *Perspectives on Politics*, Vol. 2, No. 4(2004). pp. 728-730.

4. 김정은 체제가 물려받은 과제

김정은 체제의 미래와 관련 유훈통치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하는 향후 2~3년이 매우 중요하다. 김정은 체제는 당분간 김일성 전 주석의 후광과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에 기대어 그럭저럭 작동될 수 있다. 그러나 유훈은 유훈일 뿐이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현실 앞에서 언제까지 유훈에만 의지해서 국가를 이끌어 갈 수는 없다. 당면한 과제와 향후 새롭게 대두하는 과제들에 대해 김정은 체제의 해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래야 김정은 체제는 정당성을 확보하고 엘리트와 주민들을 결집시키면서 권력을 공고하게 안착시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김정은 체제는 벌써 안정화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안정화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라선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유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김정은 부위원장은 상호 충돌하여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들을 물려받았다. 김일성-김정일로부터 이어져온 강성대국 건설의 논리구조가 그렇다. 김일성 전 주석은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수령이 유일적으로 영도하는 체계를 수립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 과제인 정치사상·군사·경제강국 중 정치사상강국을 건설하였고 강성대국 건설(완성)과 조선반도 비핵화, 조국통일이라는 3대 유훈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남겼다.⁷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산은 핵과 위성, 새 세기 산업혁명, 민족의 정신력이다.⁷¹⁾ 이 가운데 실물로 존재하는 것은 핵과 위성 즉 군사강국이다. 김정일 위원장은 선군사상과 선군정치에 의해 정치사상강국을 ‘발전’시켰으며,⁷²⁾ 두 차례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⁷³⁾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고 1998년, 2006년, 2009년 인공위성(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국방공업을 발전시켰다. 정권의 담론에 불과할 수 있는 민족의 정신력을 제외하면 결국 새 세기 산업혁명이 남는데 이는 기술집약형 산업에 기초한 지식경제 강국 건설을 의미하며 김정은 부위원장에게 넘겨진 과제인 것이다.

70) 김지영. “당의 령도강화, 2012년 향한 총공세.” 『조선중앙통신』 2010.10.2.

71) 리동찬. “김정일 동지의 혁명유산.” 『노동신문』 2011.12.28.

72) 주체사상이라는 이념을 기준으로 리더십을 분류하면 김일성 전 주석은 창시자(founder)이며 김정일 위원장은 이를 발전시킨 계승자(revisionist)로 볼 수 있다. 김정은 부위원장은 일단 김정일 위원장의 선군정치와 사상을 체현(practitioner)하고 확산(missionary)시키는 역할을 자임한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유훈의 틀을 벗어나면서 어떤 사상과 비전을 내세울지 주목된다. 현재로서는 지식경제강국이라는 담론이 주목되지만 이것이 경제전반에 대한 개혁을 이끄는 새로운 이념으로 발전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이념에 따른 리더십 유형에 대해서는 Marvin J. Folkertsma, Jr. *Ideology and Leadership*.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88. pp. 11-14. 참조.

73) 최근 북한이 2010년 4월과 5월 핵무기 위력(yield)을 강화하기 위한 두 차례의 소규모 핵실험을 하였고 이 때 우라늄도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다(Geoff Brumfiel. “Isotopes hint at North Korean nuclear test.” *Nature News*. 2012.2.3. <http://www.nature.com/news/isotopes-hint-at-north-korean-nuclear-test-1.9972>. (검색일: 2012.2.4.)) 핵전문가들 사이에서 여전히 논란이 있지만 만약 이보도가 사실이라면 북한은 이제까지 핵실험을 4번하였으며 플루토늄뿐 아니라 우라늄까지 사용하여 핵융합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무엇보다 긴요한데 그 앞길을 군사강국, 즉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이라는 군사강국의 핵심 성과들이 막고 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는 여전히 지속되고 그로 인해 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유흔이라며 선군정치를 강조하면 할수록⁷⁴⁾ 경제강국 건설은 더 멀리 달아나버리는 형국이다. 결국 김정은 부위원장은 선대에서 물려받은 정치사상강국과 군사강국을 더욱 강화, 발전시키면서 새 세기 산업혁명에 기반한 지식경제강국을 건설하고 조국통일을 달성하여 통일강성대국을 이룩해야 하는 모순적이고 실현 가능성도 낮은 과제를 떠안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김정은 부위원장으로서는 이를 달성해야만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권력 기반을 공고하게 다질 수 있다. (지식)경제강국 건설은 국가재정 확보와 권력엘리트들의 특권보장, 주민들의 생활향상을 통한 지지확보를 달성할 수 있는 핵심 고리이다. 따라서 김정은 부위원장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생활향상을 기치로 내걸고⁷⁵⁾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가운데 권력엘리트들의 특권적 이익구조를 보호함으로써 권력엘리트 장악과 주민지지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제한적이고 통제된 대외개방을 통해 외부의 자원을 수혈하는 한편, 부족한 자원을 권력유지의 근간이 되는 핵심 분야와 지지층을 중심으로 배분하는 정책기조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개발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⁷⁶⁾ 위화도·황금평과 라선경제지대를 중국과 공동으로 개발하는 한편 러시아와의 협력에도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⁷⁷⁾ 이는 김정일 위원장이 급서하기 전에 추진하였던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또한 자원을 정권유지의 골간이 되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배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김정일 위원장 말기의 정책이 김정은 부위원장으로 승계된 것으로 권력교체에 더욱 강화되고 있다. 북한은 지역적으로는 평양과 회령, 사회집단으로는 국가와 지방 간부, 사법기관 종사자, 군부대, 부문별로는 국방건설에 식량과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다.⁷⁸⁾

74)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게 고향.” 『조선중앙통신』 2011.12.3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공동구호.” 『조선중앙통신』 2011.12.31.

75)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유흔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스런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신년공동사설) 『조선중앙통신』 2012.1.1.; “올해에 다시 한 번 경공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강성대국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자.”(신년공동사설) 『조선중앙통신』 2011.1.1. 등 참조

76) “외국투자은행법 수정보충.” 『조선중앙통신』 2011.12.31.;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 이사회 제1차 회의.” 『조선중앙통신』 2010.1.20.; 리태호. “국가개발을 위한 대규모대외경제협력 시동.” 『조선신보』 2010.3.2.; “국가개발은행 이사회 제1차 회의.” 『조선중앙통신』 2010.3.10.; “합영투자지도국을 합영투자위원회로 개편.” 『조선중앙통신』 2010.7.8.; 정무현. “합영투자위원회 김지혁연구원에게서 듣다, 강성대국건설 위한 외자유치.” 『조선중앙통신』 2011.6.22.; 김치관. “단독입수: 북 대풍그룹 ‘2010-2020 북한 경제개발 중점대상.’” 『통일뉴스』 2011.10.6. 등 참조.

77) 유철중. “北, 러 극동 지역에 '러브콜' 공세 강화”; “北 새 지도부, 북한경유 가스관 약속.” 『연합뉴스』 2012.1.27.

이런 가운데 북한은 내부 개혁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료지배 사회의 일종인 북한에서⁷⁹⁾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개혁의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 실제 개혁추진은 지배연합 내의 세력관계에 따라 그 속도와 내용이 달라지지만 부족이 만성화된 경제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긴장과 갈등이 항상적으로 정치 영역에 유입되기 때문이다. 북한도 예외가 아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 비록 지식경제강국을 내세우며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경제개발 문제를 고민하지만, 경제운영체계에 대한 문제의식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이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을 포함해 다른 나라의 경제개혁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이 이를 시사한다.⁸⁰⁾

다만 북한이 현재 보이고 있는 모습은 경제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국과 같은 전면적인 개방과 개혁노선을 추구한다기보다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권력엘리트와 기관들의 특권적 이익구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변화된 현실에 적응하는 양상이다. 대외경제협력도 마찬가지이다.⁸¹⁾ 이는 김정일 위원장이 급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현지도 하였던 광복지구 상업중심의 운영방식에서 확인된다. 조선신보의 보도에 따르면⁸²⁾ 북한의 외화거래 단위인 조선대성무역총회사가 중국 비해몽신유한회사와 합영으로 광복지구 상업중심을 운영하고, 중국 측 합영 파트너가 수입을 담당한다. 판매상품의 북한산과 중국산 비율은 4:6이다. 가격은 시장가격보다는 낮지만 국영상점보다는 높고 차액은 조선대성무역총회사 경상비에 포함시켜 국가가 보조한다. 소비자들은 외화가 아니라 원화로 상품을 구입한다. 김정일 위원장은 현지도에서 “상업중심과 같은 상점이 많으면 시장도 필요 없다.”고 하였으며 “이런 상업중심을 동평양에도 내오자, 제1백화점과 경쟁도 해보라.”고 지시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기사는 “조선을 대표하는 최대 규모 백화점과의 경쟁은 당연히 가격인하 경쟁”이라며 주민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한다. 여기에서 확인되는 것은 첫째, 조선대성무역총회사라는 특권기관(당)의 무역회사가 국가의 보조하에 외국 회사와 협력하여 수입상품의 국내 판매권을 행사함으로써 대외협력에서의 특권적 이익구조를 구축하고 둘째, 경쟁이라는 시장원리를 도입하고 있으며 셋째, 국영상점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입품을 소비할 수 있는 대상, 즉 수요층이 평양의 중상층일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를 통해 일반 시장을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였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이 요구하고 있는 경제협력 원칙 중 하나인 시장원리 도입이라는 ‘개혁’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권력엘리트와 기관들의 특권적

78) 좋은벗들. “김정은 지도소조 새 정책은?” 『오늘의 북한소식』 제434호 (2011.12.21.).

79) 장용석. 「북한의 국가계급 균열과 갈등구조」 참조.

80) “北 고위간부, 김정은 체제 우려 일축.” 『연합뉴스』, 2012.1.17.). 이런 점에서 권력엘리트들과 기관들의 특권적 이익구조에 포박되어 있는 김정은 부위원장이 스위스에서 유학생활을 했기에 외국의 사정에 밝아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기보다 기본적으로 내부적인 개혁압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혁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

81) 최봉대. “제3장 북한의 지역경제협력 접근 방식의 특징: 신가산제적 사인독제 정권의 ‘혁명자금 관리 제도’와 대외경제협력의 제약.” 이수훈 편. 『북한의 국제관과 동북아질서』. 서울: 한울, 2011.

82) 김지영·정무현. “마지막 현지도 광복지구상업중심, 사회주의수호자가 돌아본 인민적시책의 현장.” 『조선신보』 2012.1.24.

이익구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변화된 현실에 적응하는 방식의 일단을 보여준 것이다. 이는 북한이 개혁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 방향이 일반적으로 국제사회가 기대하는 방향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외관계와 관련하여 김정은 체제는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보다 긴요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 급서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대화 지속을 원하고⁸³⁾ 남한에 대해 미국과의 대화를 가로막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⁸⁴⁾ 그리고 일본과의 대화도 모색하고 있다.⁸⁵⁾ 한편 남한 당국과의 대화는 급서한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조의·조문, 10·4와 6·15선언 이행, 천안함·연평도 사건, 한·미연합군사훈련, 비핵화, 대북심리전, 평화체제 문제 등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대선과 총선이 있는 올해 남한의 반통일세력을 심판하겠다고 하고 있다.⁸⁶⁾

북한은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제한적이거나 고립에서 벗어나는 형국이지만 역설적으로 중국에 대한 일방적인 의존도 증가는 정치적 자주성 견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사회경제적으로도 중국에 대한 종속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모색하면서도 러시아를 끌어들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 및 일본과의 대화와 관계개선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는 사실 김정은 체제가 안고 있는 핵심적인 대외 과제 중 하나이다. 자주·친선·평화의 입장에서 모든 국가들과 우호적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고 이는 실리 극대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이런 일반적인 이유에 더해 최근 심화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어떻게든 줄여나가야 할 정치적, 사회경제적 이유가 존재한다. 이런 점에서 향후 대외관계 개선의 핵심적인 과제 중 하나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어떻게 줄여갈지가 주목되며 이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결국은 남한에 대한 접근이 될 것이다.

83) “조선외무성 대변인 미국에 신뢰조성의지가 있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 『조선중앙통신』 2012.1.11.

84) “리명박 정권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교란시킨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연구보고서)” 『노동신문』 2012.1.21.

85) 양성원. “북, 일본에 요도호 납치범 송환 협의 제의.” 『자유아시아방송』 2012.2.8.; 김종현. “北, 지난해 구속 일본인 2명 석방.” 신민재. 『연합뉴스』 2012.1.20.; “北·日, 납치문제 관련 비밀접촉.” 『연합뉴스』 2012.1.9.

86) “리명박역적패당은 우리의 대화상대가 될수있는가를 스스로 돌이켜보아야 한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 공개질문장.” 『조선중앙통신』 2012.2.2.; 김지영. “조국평화통일위원회 황철 부장에게서 듣다 《북남선언리행은 장군님의 유훈》.” 『조선신보』 2012.1.20.; “민족의 대국상에 칼질을 한 리명박역적패당은 준엄한 심판을 받고 과멸에 처하게 될 것이다-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조선중앙통신』 2011.12.31.; “민족의 대국상앞에 저지른 리명박역적패당의 만고대죄를 끝까지 결산할것이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 『조선중앙통신』 2011.12.30. 등 참조.

5. 맺는 말

이제 출범한지 채 두 달이 되지 않은 김정은 체제는 현재 걸으로 드러난 모습으로는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반적인 독재정권의 정치변동에 비추어 본 핵심 요소들을 살펴보아도 김정은 체제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김정은 체제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 과제들을 보면 김정은 체제의 지배연합 내부에서는 상당한 진통과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김정은 체제가 어떤 모습을 보이며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는 김정은 부위원장과 권력엘리트들, 권력엘리트들 간, 그리고 정권과 주민들 간의 변화하는 세력관계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김정은 체제는 걸으로 드러난 모습과 달리 불안정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안고 있다.

그 과정에서 북한 정권은 존속하더라도 김정은 부위원장은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할 수도 있다. 물론 김정은 부위원장이 명목상의 구심점(figurehead)로 남아 있을 수도 있고 과거 김정일 위원장과 같이 권력을 장악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김정은 체제의 미래는 열려 있는 것이다.^P

북한의 체제안정과 점진적 변화를 위한 대북정책의 과제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1. 들어가는 말
2. 현 단계의 남과 북 그리고 남북관계 현실
3. 대북정책의 발전을 위한 제언

북한의 체제안정과 점진적 변화촉진을 위한 대북정책 과제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1. 들어가는 말

최 교수는 … 북한사회의 붕괴는 필연적이라고 밝혔다. … 최 교수는 또 김일성 사후의 북한은 자유당 말기 또는 유신 말기와 비슷하다고 전제, “1990년대 말에는 북한체제 붕괴로 싫든 좋든 북한의 부실체제를 남한이 고스란히 떠맡을 수밖에 없는 ‘떠맡기 식 통일’이 예상된다.”고도 주장했다. 북한이 붕괴할 경우 함경북도, 평안북도, 양강도 주민은 가까운 북만주로, 평안남도, 함경남도, 황해도, 자강도 주민은 군사분계선을 넘거나 김만철 일가처럼 동해를 거쳐 남한으로, 일부는 ‘보트피플’이 돼 일본으로 유입될 것. (동아일보 1994.7.2.)

프랑스의 유력 좌파 일간지인 리베라시옹은 “북한의 스탈린주의적 체제의 붕괴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정통한 중국 소식통을 인용, 1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김일성 주석 사후 북한이 권력승계 문제에 있어 심각한 위기에 휘말려 있으며, 구소련 공산권의 붕괴 이후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어 북한체제의 붕괴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세계일보 1994.9.14.)

서 위원은 “북한체제를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 중국·베트남처럼 사회주의의 기본 이념을 유지하면서 개혁개방을 추진하는 것이지만 개혁에 나설 경우 체제붕괴가 뒤

따를 수 있다.”면서 북한이 체제유지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현 북한지도부가 변화로 인한 모험보다는 현상유지를 더 선호할 것이며 결국 이로 인해 현재의 위기를 돌파할 정책대안을 찾지 못해 김정일 정권은 과도정권으로 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1996. 03. 14)

- 최근 김정일 사망으로 북한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북한의 체제안정성 여부라고 할 수 있으나 북한은 차분하게 체제정비를 진행하고 있는 반면, 오히려 남한은 북한의 변화 여부 등에 과도하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음.
 - 유일지배체제에서 최고지도자의 사망으로 체제가 붕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
 - 현재 북한에서 뚜렷한 불안정 요소를 찾아보기 힘들고 나름대로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권력이양 추진
- 북한의 체제가 안정되었는가 하는 질문과 더불어 북한사회는 변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 이는 ‘3대 세습’을 한 북한에서도 중등과 같은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음.
 - ‘비정상’적인 북한은 오래 못 갈 것이라는 관성적 사고와, 현 정부에서 대북정책을 주도한 사람들이 강경정책의 효과를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결합
-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김정일 사망을 계기로 북한의 안정이 북한 자체는 물론이고 남한을 포함한 주변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보수적인 언론을 포함하여 북한 관련 전문가 대부분과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 대부분이 북한의 안정을 바란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
- 한편 최고지도자의 교체를 북한의 변화뿐만 아니라 대북정책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일반화되고 있는 바, 이는 다음의 몇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 절대권력을 바탕으로 하는 북한에서 최고지도자 교체로 정책변화가 가능하다는 인식
 - 정부 내에서 유화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던 사람들이나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비판적이었던 집단에서는 정책변화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기대
- 그러나 김정일 사망과 관련한 북한 관련 논의나 대북정책 관련 논란은 전반적으로 현실에 대한 냉정한 분석, 특히 그동안의 남북관계 및 남북한의 변화에 대한 천착이 부족하며 여전히 정파적이고 이념지향적인 특성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과거 햇볕정책이나 비핵개방3000정책 관련 논의 구조화 유사⁸⁷⁾

87) 대북정책 혹은 통일정책에 대한 논란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내정치적 이해가 바탕에 깔려 있는 논의 구조

- 남북관계 및 대북정책 전환에 대한 논의가 김정일 사망에서 비롯된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으나, 필요한 것은 현 단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음.

2. 현 단계의 남과 북 그리고 남북관계 현실

가. 대북정책 논의를 위한 조건

- 사회주의 국가에서 최고지도자의 교체가 정책 및 체제 변화와 맞물린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김정일 사망에 따른 북한정책 변화, 그리고 북한체제 변화, 더 나아가 남북관계 변화를 따져보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
 - 소련의 스탈린, 중국의 모택동 사망 이후 정책의 급격한 변화 경험
- 그러나 김일성 사망을 포함하여 최고지도자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변화가 크지 않았던 경우도 적지 않으며 동시에 변화가 있느냐 여부보다는 변화의 방향이나 정도가 어느 수준인가, 그리고 변화가 어느 시점에 일어나는가 하는 점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우 최고지도자 교체에도 커다란 변화가 없었으며, 남한 역시 유신체제 붕괴 후 전두환 정권의 정책이 큰 틀에서 전과 유사했던 경험
 - 모택동 사망 이후 화국붕 및 4인방 시대를 거쳐 등소평의 개방정책이 있었다는 점 주목
- 따라서 최고지도자의 교체와 더불어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 추세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정책 변화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임.
- 그럼에도 현 시점에서 남북관계 변화 등을 점검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바, 이는 특히 2012년의 경우 남북한을 포함한 주변 국가들에서 중요한 정치행사가 개최되면서 북한 내부, 남북관계, 그리고 한반도 주변정세에서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남한·미국은 국회 및 대통령 선거
 - 중국의 최고지도자 교체
 - 북한은 강성대국 원년으로 김일성 탄생 100주년, 김정일 탄생 70주년
- 특히 김일성 탄생 100주년인 상반기에는 남한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정돼, 남한 내에서는 정치이념적 논쟁이 확산되는 한편 북한은 대내외적 차원에서 다양한 조치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북한의 동향을 전망하는 것은 남북한 관계 진전 및 남남갈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음.
- 선거과정에서 대북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논란이 활성화할 가능성
 - 북한은 전통적으로 남한의 정치적 전환기에 공세적 조치를 취한 경향
 - 김정은 체제 안정화를 위한 대남정책 추진의 필요성

나. 북한의 현재 상황

- 북한은 김정일 사망과 관련된 남한의 조문 방문을 수용하였으나, 정부의 제한적 조치에 대하여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대통령, 통일부 장관 등을 비롯한 대남 비방을 강화시켜왔으며, 신년공동사설에서도 대남 관계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하였음.
- 조문 제한을 비판하고 천안함·연평도 사건 관련 정부조치 비판
 - 대통령 및 장관에 대한 실명 비판 진행
 - 2011년 공동사설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으나 삭제되었고, 남한 내에서는 조문 관련 국론이 분열되었다고 주장
- 남한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집약된 것이 국방위원회 명의의 공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음.
- ① 우리 민족의 대국상 앞에 저지른 대역죄를 뼈저리게 통감하고 사죄할 결심이 되어있는가
 - ②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전면 리행할 의지를 내외에 공식 표명하겠는가
 - ③ 《천안》 호사건과 연평도포격전을 걸고 우리를 더 이상 헐뜯지 않겠다는 것을 세계 앞에 공언할 수 있는가
 - ④ 우리를 과격으로 삼고 별리는 대규모적인 합동군사연습을 전면중지할 정책적 결단을 내리겠는가
 - ⑤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그릇된 견해를 버리고 비핵화를 위한 실천에 발을 잠글 결심이 되어있는가
 - ⑥ 악랄한 반공화국 심리모략전에 계속 매달릴 작정인가

- ⑦ 북남협력과 교류를 진정으로 민족의 평화번영과 공리공영을 도모하는 방향에서 재개하고 활성화할 용의가 있는가
 - ⑧ 현 정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꿀 데 대한 우리의 원칙적인 요구에 호응해 나설 수 있는가
 - ⑨ 《보안법》을 비롯한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악법들을 즉시 철폐할 결단을 내릴 수 있는가
- 그동안의 각종 성명, 신년공동사설과 공개질문 등을 참고하고 비공식적으로 북한과 접촉한 인사들의 증언을 고려할 때, 현 정부와 대화나 교류를 추진할 가능성이 적은 반면, 경험이나 사회문화 교류는 일정한 수준에서 추진할 여지가 있음.
- 6·15, 및 10·4를 강조하고 있으며, 교류의향을 묻고 있고, 금강산·개성 사업 등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태도 견지⁸⁸⁾
 - 민간 부문과의 교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경향
 - 정부와 시민사회의 분리를 겨냥
- 북한의 식량부족은 만성화되어 있고, 경제위기가 극복될 가능성은 여전히 크지 않는 등 경제적 환경이 좋지 않은 까닭에 경험을 중심으로 남북관계 활성화 및 대북지원의 필요성도 상존하고 있으나 2011년의 농업생산이 비교적 원활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 중국과의 경제교류가 확대되고, 평양지역의 건축이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남한의 대북지원이 절실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됨.
- 지원을 받으면 좋겠지만 정치적인 명분을 급힐 정도는 아닌 상황⁸⁹⁾
- 대남관계의 개선이나 지원의 필요성은 대내적 차원에서 김정은 체제의 안정에 우선할 수 없을 것이며 역으로 대남공세를 강화하고 일정 수준의 긴장을 유지하는 일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임.
- 한편 북한 내부, 특히 사회 분야는 최근 변화가 심화되고 있는 바,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음.
- 배급제의 이완으로 사회적 이동의 확대 및 정보유통의 확대
 - 국가 능력의 약화와 더불어 통제체제의 효율성 감소
 - 한류 문화 등 대외 문화의 확산
 - 새로운 세대의 등장
 - 사회적 차별 확대와 재계층화 진전

88) “북남협력과 교류는 민족의 공리공영을 위한 전 민족적인 사업이다. 북남협력과 교류에 민족적 화해와 단합, 평화번영과 통일로 가는 길이 있다. 그래서 시작한 개성공업지구의 협력이고 금강산 관광이었다.” 공식질문의 관련 조항 참조.

89) “결코 몇 줌 안 되는 아이들의 《영양식품》에 놀아날 우리가 아니다”

- 이념 약화와 사회통합 능력 쇠퇴

○ 북한사회의 변화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진행되어 왔듯이 최고지도자의 교체가 곧바로 사회체제의 변화를 유인하기는 쉽지 않으나 강력하게 권력이 집중되어 왔던 북한체제에서 김정일의 사망과 김정은의 등장은 사회변화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음.

- 사회구조적 변화 요인과 결합

○ 사회변화라는 개념이 복합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사회통합의 유지 여부와 사회변혁운동의 가능성을 포괄하는 차원에서 사회체제의 안정성을 검토해 보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북한 사회체제의 안정성을 지탱해주는 요인과 이를 위협하는 요인을 구별하면 다음과 같음.

〈체제유지를 추동하는 요인〉

- 반세기 동안 유지되어온 강력한 유일지배체제와 기득권 세력의 존재
- 당적 지배를 통한 물리적 통제기구의 작동
- 남한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의 현 북한체제 유지 희망
- 변혁을 추동할 시민사회의 미성숙
- 사회적 변화 양상에 나름대로 대응하는 북한 당국의 정책 변화 능력: 선군정치와 관련 군부집단에 대한 위계를 높이고 있으며, ‘광폭정치’를 강조하면서 과거 비판의 대상이거나 사회적 하위층으로 인식하였던 집단들도 포용하려는 노력. 외부문화 유입에 대한 문화적 대응 능력.

〈체제불안을 유인하는 요인〉

- 시장화의 진전과 배급체제의 붕괴로 사회적 통제 능력 저하
- 외부문화의 유입으로 이념·사상적 통일성의 균열
- 시장화 및 외부문화 유입으로 사회계층의 재구조화 진행
- 국가능력의 전반적 하락으로 물리적 통제기구의 능력 저하
- 탈이념적인 새로운 세대의 성장

○ 북한 사회체제의 안정과 통합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는 요인들과 저해하는 요인들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북한 사회체제의 유지에 기여하는 요인의 힘이 더욱 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체제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들이 사회적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외부문화의 유입이 활성화되면서 이념·사상적 통일성이 균열되고 있다고

- 는 하지만 그것이 바로 체제변혁의 방향으로 향하는 것이 아닐 수 있음.
- 과거와 달리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게 되고, 심지어 남한사회가 잘살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현 체제를 부정하거나 변혁하고자 하는 지향성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 많은 북한주민들이 김일성이나 김정일 시대만큼 체제에 헌신하거나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의 생계문제가 되는 것이며, 드라마에서 보이는 남한의 현실을 동경한다고 해서 체제전복을 기도하지는 않을 가능성
- 또한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들은 그 자체로서 양면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시장화의 진전이라는 사회적 환경 변화는 기존의 배급체제 유지에는 부정적일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군부나 권력기관에 소속된 기득권층이 시장화에서 새로운 이득을 창출하면서 기존 체제를 강화하는 결과 초래
 - 시장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사회주의 자본가나 돈주도 체제 변혁을 추구하기보다는 기존 지배집단과 결탁하거나 지배집단에 편입되면서 사회체제의 안정도를 높일 가능성
- 반면에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은 북한주민들에게 불안감이나 부정적인 의식을 확산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을 가져다 줄 수 있음.
- 김정일의 사망은 분명히 일반 주민들에게 상실감을 불러일으키고 위기감을 고취시키는 면이 있으나 동시에 불확실성의 제거라는 의미도 존재⁹⁰⁾
 - 최고지도자의 사망을 적절하게 위기의식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활용한다면 선전선동의 효과는 배가
- 또한 체제안정과 사회통합에 관련된 요인들은 가변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
- 시장체제에 익숙한 주민들에게 적절한 배급이 보완되지 않는 가운데 시장을 억압하는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체제불만 확산
 - 시장세력과 기득권세력과의 결탁은 이해를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해상충될 여지
 - 새로운 세대를 적절하게 포섭하지 못할 경우 조직화가 진전되면서 변혁적인 사회집단의 탄생 가능

다. 남한의 현재 상황

- 현 정부는 ‘비핵개방 3000’ 및 ‘상생공영의 대북정책’ 등을 내세우고 원칙을 강조하는 대북정책을 지향하여 왔으나, 남북관계 개선은 물론 북한의 유의미한 정책변화도 유도

90) 영결식에서 선전선동을 담당하는 김기남이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였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음.

- 북한의 도발 반복과 남북관계 악화 초래
- 핵문제의 진전도 부재

-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도 점화 확대되고 있는 한편, 임기 말에 정치사회적 문제들이 빈발하고 경제적인 조건도 좋지 않은 현실에서 정부 자체와 정책에 대한 지지도 하락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강경한 대북정책이나 남북간장이 보수층의 정치적 이해에 부합한다는 관행도 와해되는 경향
- 정부정책, 특히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이 확대되는 가운데 최근 김정일의 사망을 계기로 대북관계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인도적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음.
 -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 협의회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의 신입회장으로 선출된 인명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공동대표는 대북지원을 강력히 주장
 -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으나 북·미 간에도 대북 지원과 관련된 논의가 지속되는 상황
- 현재 통일부 장관도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며, 원론적이지만 적극적인 의사를 표명한 바 있는 한편, 남북관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국내 언론사와의 인터뷰 및 각종 강연에서 의지 표현
 - 미국 방문 중 반기문 UN 사무총장과의 회담과정에서도 대북 지원 의사 표명
- 김정일 사망 이후 보수언론이나 보수집단은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 부재 시 남북관계 전환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최소한 인도적 지원과 남북관계 복원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점차 확산되는 경향임.
 -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도 새로운 정강정책 등에서 유연한 대북정책 지향을 천명
- 2012년 치러질 두 번의 선거과정에서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며, 사회적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바, 특히 5·24조치와 대북지원 문제 등이 논란의 초점이 될 가능성이 있음.
- 진보적인 시민사회 단체는 물론이고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들은 대북정책의 전환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와 시민사회의 분리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음.
 - 진보적 단체의 경우는 정치적 목적이 뚜렷
 - 지원단체 등은 그동안 지원사업의 지지부진으로 조직유지와 존재기반 확보 자체에 위협을 느끼는 경우가 다수

- 정부 입장에서는 그동안 유지하여 온 대북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정책전환이 어려운 가운데, 북한뿐만 아니라 현 정권과의 차별성을 시도하는 여당을 포함하여 야당 및 시민사회에서 집중적인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큼.
 - 남남갈등이 지속될 것이지만 힘의 균형은 상실될 가능성
 - 다만 북한의 태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중요

라. 남북관계의 단기적 전망

- 올해는 특히 강성대국 선포와 김정일 추모 분위기 고조를 추진할 필요성 때문에 대내 행사에 집중할 가능성이 있으며, 구체적인 제의보다는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남한 정부나 대통령 등에 대한 비판을 시도할 가능성이 큼.
 - 주요 무기 발사 등 김정은 체제의 위력을 과시하기 위한 이벤트를 벌일 가능성도 상존
- 남한 정부에 대한 비판은 강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남한의 사회단체나 인사들이 북한의 행사를 지지하고, 김일성 생일을 축하한다는 식의 정치적 선전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음.
 - 전통적으로 관영매체를 통하여 남한 시민의 북한지지를 선전하는 경향
 - 김정일 사망과 관련하여서도 로동신문 등에 남한 주민 및 단체, 그리고 해외단체의 추모 분위기 강조
 - 남한의 단체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해외 친북단체 등이 행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에 활용할 가능성
- 남한의 시민사회도 김정일·김일성 생일과 같이 정치성이 높은 행사기간에는 신중할 가능성이 있으나 지원 단체들을 선거과정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문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음.
 - 2011년에 추진하고, 일부 합의되었던 지원 사업이 김정일 사망으로 임시 중단되어 있는 현실 고려할 필요
 - 식량문제, 의료문제 등 북한 지원 요인은 상존
 - 선거기간에 행동이 제한될 정부를 효과적으로 압박할 여지
 - 여당의 경우도 선거과정에서 여론의 향배에 따라 대북정책 전환의 사례로서 인도적 지원을 압박할 가능성
- 김정일·김일성 생일과 관련된 북한의 대남정책은 전반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으나 올해의 경우 그 사이(4월11일)에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생일행사와 관련 없이 대남공세가 과열화될 가능성이 있음.

- 17대 총선에서는 보수파에 반대 투표할 것을 주장
 - 18대 총선에서는 미사일 발사 시도 등의 군사적 긴장 조성과 MB정권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등 북한의 '대남압박'이 강화
 - 북한은 18대 총선의 대남압박이 선거개입 의도는 아니었다고 주장
- 선거 국면에서 북한은 남한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은 강화하면서, 야당 및 남한의 시민사회에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남남갈등을 유도할 가능성이 없지 않으나 그 강도는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임.
- 국내정치에 개입하기를 바라고 있으나, 최근 추세는 개입의지가 점차 약화되는 경향
 - 올해 대남 부문은 북한의 정책우선 순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을 가능성
 - 남한의 선거에서 북한변수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경향을 북한도 인지
- 남한의 경우 선거과정에서 현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이 여야를 막론하고 강화될 것이고, 시민사회는 보수·진보로 나뉘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논란이 확산될 여지는 있지만, 북한 방문 등의 자극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음.
- 야당이나 진보진영에서는 도발적인 행동이 정치적으로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
 - 북한변수가 국내 정치에서 미치는 영향이 복잡해지면서, 각 진영에서 어떤 입장이나 주장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경향⁹¹⁾
- 2011년 하반기부터 정부는 북한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유화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근본적인 정책변화를 추진할 가능성은 높지 않음.
- 현 정부는 반공산주의, 기독교근본주의, 시장만능주의의 이념을 견지⁹²⁾
 - 북한붕괴론과 급변사태 압박론이 여전히 지속⁹³⁾
 - 남은 임기 자체가 짧은 까닭으로 변화된 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려우며, 전통적 지지계층을 고려하는 입장
- 남북관계 전환을 위한 대외적 요인도 크지 않은 바, 미국이나 중국 모두 2012년 선거 및 권력교체를 앞두고 국내적 관심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선거를 치르는 미국의 집권당에서는 중국과의 대결구도를 부각시키는 것이 정략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경향임.
- 보수파의 공격을 막아야 하는 오바마 정권의 현실

91) 과거 강경정책이 보수적 유권자에 유리하다는 것이 정설이었으나, 최근 남북긴장 심화가 강남 등의 보수집단에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대북정책 성격과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는 경향.

92) 박명림, “남구관계: 거시와 미시, 구조와 정책의 한 융합 접근,” 「김일일 이후 시대의 한반도」 한반도포럼 주최 세미나 (2012), 114쪽.

93) 김근식, 「대북포영정책의 진화를 위하여」 (서울: 한울아카데미, 2011), 34쪽 참조.

- 국제적인 이슈인 북한 핵문제의 해결 압박은 여전하지만, 이미 북한 핵문제는 20년이 넘은 것으로서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관련 국가들이 모두 인지하고 있으며, 가시적인 전환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교착상태가 권력교체기에 오히려 유리할 수 있음.⁹⁴⁾
- 남북한 내부나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남북관계 변화는 단기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공식적인 정책 수준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음.
 -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정부의 정책변화가 동반되지 않는 한, 유의미한 남북관계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움
- 시민사회, 특히 지원단체 등을 중심으로 인도적 지원과 같이 일정 부분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으나, 보다 중요한 것은 선거과정에서 대북정책 및 통일 관련 논의가 활성화되면서 차기 정부와 ‘2013년 체제’의 북한문제가 정리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다는 점 임.

3. 대북정책의 발전을 위한 제언

가. 통일문제에 대한 성찰 필요

- 그동안 대북정책이나 통일정책 논의는 전반적으로 국내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었고, 현실보다는 당위에 바탕을 둔 경향이 있었음.
 - 통일을 정치구조 및 체제이념의 차원에서 이야기: 정치이념적 통합만 강조
 - 남북관계는 제로섬: 흡수통일과 적화통일을 지향
 - 통일문제를 체제와 구조의 문제로 인식: 남북한 주민 등 행위자에 대한 무관심
 -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통일접근: 남북한 내부 사회에 대한 경시
 - 통일담론의 기본적 토대는 정서적 당위성: 한 민족=한 국가
 - 통일담론의 주도세력은 분단체제의 수혜자: 통일로 기득권을 상실할 경우 분단체제 지지

94) 북한 핵문제의 변화 추이에 대해서는 조민·김진하, 「북핵일지 1995-2009」(통일연구원, 2009) 참조.

- 향후 발전적인 통일논의를 위한 통일담론이 필요한 바 이는 다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함.
 - 분단구조는 남북한에 걸쳐 체제와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 분단은 사건이 아닌 구조화 과정
 - 분단문제는 통일 이후에도 지속 가능성: 해방 이후 식민지 문제와 유사, 독일 통일 이후 사회갈등 참조
 - 통일은 두 개의 국가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분단으로 파생된 문제를 해소하는 것: 통일도 사건이 아닌 과정
 - 분단문제가 다차원이기 때문에 통일도 다차원적: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하위체제 별 통일 구조와 개인 차원의 통일 병존
- 대북정책이나 통일정책도 정략적 이해나 이념적 잣대가 아니라 남북한 사회구성원들의 행복 증진과 공동체의 발전이라는 목표를 지향하는 가운데 구성되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현실적 가능성을 고려하는 바탕에서 입안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임.
 - 핵문제 해결, 북한체제 변혁에 남한의 정부나 시민들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가
 - 남북한 주민들의 현실과 지향을 명확히 인식
- 선거과정에서 지엽적인 대북정책 논란보다는 통일과 북한문제의 본질에 대한 토론이 필요함.
 - 대북지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⁹⁵⁾
 - 북한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 통일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가

나. 대북정책 발전을 위한 제언

- 북한의 정책변화와 남한 내부의 상황변화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과거에 있었던 유사한 경우를 광범위하게 연구분석하여 예상 가능한 북한의 대응을 정리할

95) 예를 들어 대북 지원은 인도적 차원, 민족적 차원, 국가이해적 차원 등으로 목적을 구별할 수 있음.

표 4 대북지원의 차원

지원의 차원	명분 및 목적	책임수준	지원내용	사업의 기준
민족적 차원	민족애·공동체정신	무한	긴급구호+개발지원	북한
인도적 차원	인류애의 실현	유한	긴급구호	북한
국가적 이해	정치경제적 실리	유한	긴급기호+개발지원	남한

필요가 있으며, 선거과정에서 남북관계는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 기간의 북한 대응 정리
 - 선거가 대북정책에 미친 영향 검토
- 선거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반복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급한 대북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일도 필요할 것임.
- 급격하게 대북정책 전환을 추진하기보다는 인도적 지원이나 6·15 관련 단체의 대북 접촉을 허용하는 것을 고려
 - 갈등이나 논란의 원인 자체를 미리 제거하는 일도 효과적
- 정부 차원에서 정책변화가 어렵다고 한다면 그동안 남북관계에 기여한 시민사회의 역할을 고려할 때 민간 부문의 대북관계 개선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⁹⁶⁾
-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에도 필요
 - 북한도 정부 차원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지만,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협조적
- 정부 차원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짧게는 향후 1년의 국내적 정치일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고, 정부의 대북정책을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에 대한 정리가 전제 되어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남북관계에서도 남한 내부의 국내적 요인의 결정력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내정치 상황이 무엇보다 중요
- 남북관계 복원이 급격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관계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경협 활성화, 사회문화교류 복원, 인도적 지원의 확대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음.
- 국제무대의 스포츠 교류 등도 고려
-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 및 취약계층의 심각한 영양실태 등을 고려할 때 대북지원의 폭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제약을 해제하는 동시에 민간 부문과 국제적 차원의 지원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단체나 정부의 실적보다는 실질적인 효과를 중시하는 것이 중요
- 우리말사전, 문화재 관련 사업도 지속성이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복원할 필요가 있음

96) 시민사회가 통일문제에 기여한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북한 바로 알기 운동이 상징하고 있듯이 분단 이래 한반도를 지해하였던 냉전문화 극복에 일조

둘째,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하여 남북한 사람들 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 제공.

셋째, 북한 및 통일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를 확산하는 데 기여

넷째, 국가가 독점하던 통일 논의를 다양화함

며, 민간 부문의 사회문화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임.

- 경제협력과 관련 개성공단 사업을 확장하고, 금강산 및 개성 관광사업을 복원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음.
- 단순한 통일비용이 아니라 통일을 준비하는 사회적 토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도 추진하여야 할 것임.
 - 교류확대 등을 위한 법과 제도 준비
 - 통일을 추진한 전문가 집단의 양성과 통일세대를 위한 대비 작업
- 선거를 통하여 남남갈등이 격화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10년의 대북정책과 보수적인 5년의 대북정책을 견주어 실질적인 통일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나 시민사회가 '소통'을 지향하는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음.
 - 그동안 남북관계·사회문화교류·경제협력 사업 전반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필요
 - 남북관계와 관련된 논란의 단순 반복을 극복 **P**

김정은 체제의 향방과 주요 과제

- 강동완·박정란. 「한류 북한을 흔들다 : 남한 영상매체의 북한 유통경로와 주민 의식 변화」. 서울: 늘봄플러스, 2011.
- 김근식. “김정은 체제의 미래와 남북관계.” 제32회 KPI 평화포럼 자료집 (2011.12.27.)
- 김병로. “2012년 신년공동사설로 본 북한체제: 과속 스캔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칼럼 2012.1.3.
- 김병로. “김정은 체제의 현황과 남북관계.” 제32회 KPI 평화포럼 자료집 (2011.12.27.)
- 김수암 외. 「북한 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서울: 통일연구원, 2011.
- 김홍광. “북한에도 3G 핸드폰과 인터넷 도입 열풍.” 『통일한국』 2010년 12월호;
- 동용승. “북한사회의 양극화, 인민의 활력소?” 『민족화해』 통권 제54호 (2012년 1-2월호)
- 량기석. “3대 세습 후계체제와 2010년.” 『임진강』 통권 10호(2010년 겨울).
- 류경원. “조선의 정치형세와 화폐개혁 고난 및 천안함 사태.” 『임진강』 통권 8호(2010년 여름)
- 박형중. “북한 권력구조와 정책 방향.” 통일연구원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12.1.18.)
- 박형중. “김정은 후계체제와 중앙과 지방의 전면적 간부교체.” KINU Online Series CO 11-32 (2011.11.17.)
- 손혜민. “박기원, 그 순천사람.” 『임진강』, 통권 5호(2009년 9월)
- 신범철. “김정은 체제의 향방과 정책적 함의.” 『주간국방논단』 제1392호 (2012.1.2.);
- 오경섭. “김정일 사망 이후 북한의 국내정세.” 세종연구소. 「정세와 정책」 (2012년 2월호)
- 유호열. “김정은 세습 정권과 권력구조 변화 전망.” 제3회 한반도포럼 학술회의 발표자료. (2012.2.2.).
- 이우영. “김정일 사후 북한의 정책 전망.” 국회입법조사처 간담회 자료 (2012.1.11.)
- 이우영. “김정일 사망과 북한사회의 변화.” 제3회 한반도포럼 학술회의 발표자료. (2012.2.2.).
- 장용석. 「북한의 국가계급 균열과 갈등구조」.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 장용석. “국가사회주의와 국가계급 지배의 동태성: 북한지배체제 연구에 대한 함의.” 『통일문제 연구』 통권 51호(2009년 상반기).
- 장용석. “김정일 사후 북한의 정책 전망.” 국회입법조사처 간담회 자료 (2012.1.11.)
- 장용훈. “김정일 사후 북한의 정책 전망.” 국회입법조사처 간담회 자료 (2012.1.11.)
- 정성장. “‘수습 지도자’인가, ‘준비된 지도자’인가” 『시사저널』 1160호 (2012.1.11.)
- 정성장. “2012년 북한정세 전망.” 세종연구소. 「정세와 정책」 (2012년 1월호);
- 정창현. “김정은 체제의 향후 전망과 우리의 대응.” 『창비주간논평』 (2012.1.25.);

- 최 강. “Post-김정일 시대의 한반도 정세 전망.” *IFANS FOCUS* (2011.12.30.);
- 최봉대. “북한의 지역경제협력 접근방식의 특징: 신가산제 사인독재정권의 혁명자금관리제도와 대외경제협력의 제약.” 『현대북한연구』. 제14권 제1호(2011년).
- 최봉대. “제3장 북한의 지역경제협력 접근 방식의 특징: 신가산제적 사인독재 정권의 ‘혁명자금 관리제도’와 대외경제협력의 제약.” 이수훈 편. 『북한의 국제관과 동북아질서』. 서울: 한울, 2011.
- 한기범. 『북한 정책결정과정의 조직행태와 관료정치: 경제개혁 확대 및 후퇴를 중심으로 (2000-09)』.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홍익표. “2012년 김정은 체제의 출범과 경제강국 건설 전망.” 코리아연구원 특별기획 제37호;
- EAI. “김정은 체제의 미래와 한국의 전략: 공진(coevolution) 전략의 본격적 모색.” EAI 논평 제24호 (2012.1.2.)
- Bratton, Michael and Nicolas Van De Walle. “Neopatrimonial Regimes and Political Transitions in Africa.” *World Politics*, Vol. 46, No. 4 (July, 1994).
- Brumfiel, Geoff. “Isotopes hint at North Korean nuclear test.” *Nature News*, 2012.2.3. <http://www.nature.com/news/isotopes-hint-at-north-korean-nuclear-test-1.9972>. (검색일: 2012.2.4.)
- Cho, Han Bum, “The Possibility of a Crisis in North Korea in 2012.” *KINU Online Series* 2012-03 (2012.1.9.)
- Dale, Gareth. “Modelling Democratic Transition in Southern and Central Europe: Did East Germany Experience ‘Transición’ or ‘Ruptura?’” in Yannis A. Stivachats (ed.), *The State of European Integration*, Burlington: Ashgate (2007)
- Eberstadt, Nicholas. “North Korea’s kim Jong Il Failed to Prepare His Successor.” *The Daily Beast*, December 20, 2011. <http://www.thedailybeast.com/articles/2011/12/20/north-korea-s-kim-jong-il-failed-to-prepare-his-successor.html>. (검색일: 2012.2.2.)
- Ezow, Natasha M, and Erica Frantz. *Dictators and Dictatorships: Understanding Authoritarian Regimes and their Leaders*, New York: The Continuum International Publishing Group (2011)
- Folkertsma, Marvin J., Jr. *Ideology and Leadership*.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88.
- Frank, Reudiger. “North Korea after Kim Jong Il: The Risks of Improvisation.” *38 North Succession Watch*, January 12, 2012. <http://38north.org/2012/01/rfrank011112>. (검색일: 2012.2.2.)
- Gause, Ken. “Leadership Transition in North Korea.”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Report*, January 2012. <http://www.cfr.org/north-korea/leadership-transition-north-korea/p27071>(검색일: 2012.2.2.)
- Gause, Ken. “Decision-making in a Post-Kim Chong-il North Korea.” *The Peninsula* (Washington D.C.: KEI, December 23, 2011). <http://blog.keia.org/2011/12/decision-making-in-a-post-kim-chong-il-north-korea>. (검색일: 2012.2.2.)

- Green, Michael J. "North Korea After Kim Jong Il." *Washington Post*, December 20, 2011;
- Hale, Henry E. "Eurasian Politics as Hybrid Regimes: The Case of Putin' s Russia," *Journal of Eurasian Studies* 1 (2010)
- Hamisevicz, Nicholas. "Danger Behind the Veil of Transition in North Korea," *The Peninsula* (Washington D.C.: KEI, December 22, 2011). <http://blog.keia.org/2011/12/danger-behind-the-veil-of-transition-in-north-korea>. (검색일: 2012.2.2.)
- Helke, Gretchen and Steven Levisky. "Informal Institutions and Comparative Politics: A Research Agenda." *Perspectives on Politics*, Vol. 2, No. 4(2004)
- Klingner, Bruce. "Morning Bell: The Death of Kim jong Il." *The Foundry*, December 19, 2011. <http://blog.heritage.org/2011/12/19/morning-bell-the-death-of-kim-jong-il>(검색일: 2012.2.2.)
- Manin, Mark E. "Kim Jong-il's Death: Implications for North Korea's Stability and U.S. Policy."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42126*, December 22, 2011.
- Paik, Haksoon. "kim Jung Un's Power and Policy: Current State and Future Prospects." December 27, 2011. <http://38north.org/2011/12/hskim122711>
- Pridham, Geoffrey. "*The Dynamics of Democratization: A Comparative Approach*." (London and New York: 2000)
- Revere, Evans J.R. "Dealing with North Korea' s New Leader: Getting it Right." *PacNet* No. 70A (December 27, 2011)
- Snyder, Richard. 1992. "Explaining Transitions from Neopatrimonial Dictatorships." *Comparative Politics*, Vol.24, No.4
- Teorell, Jan. *Determinants of Democratization: Explaining Regime Change in the World, 1972-2006*.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노동신문」
「조선신보」
「조선중앙통신」
「오늘의 북한소식」
「경향신문」
「동아일보」
「연합뉴스」
「자유아시아방송」
「조선일보」
「중앙일보」
「프레시안」
「DailyNK」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제51차 전문가포럼 |

김정은 체제의 향방과 우리의 선택

NOTES

|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제51차 전문가포럼 |

김정은 체제의 향방과 우리의 선택

NOTES

|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제51차 전문가포럼 |

김정은 체제의 향방과 우리의 선택

NOTES